

CONTENTS

2024 여름호 Vol. 73

기획특집: 성 주류화 제도의 혁신 사례

- 004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 사례 | 조영주
- 012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례 | 김영숙
- 019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과정과 성과 | 주재선

이슈리뷰

- 030 제22대 총선과 20%의 여성 국회의원, 60인에게 거는 성평등 정치에
대한 기대 | 김은경
- 041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 김효정
- 047 조앤 윌리엄스 교수 초청 세미나 후기: 초저출생 시대 여성과
노동 관련 정책적 교훈 | 김우인·김유민

통계로 보는 여성

- 054 다양한 가족 현황과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 이진숙

국내·외 여성통신

- 068 해외
- 085 국내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 094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 095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 09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 097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기획특집

성 주류화 제도의 혁신 사례

-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 사례**

조영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례**

김영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과정과 성과**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 사례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추진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그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가져 온 성과는 적지 않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상 과제 수가 25,000개를 넘어섰고, 개선의견 수용률도 매해 증가하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정책 개선 이행률도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¹⁾ 제도적 측면에서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를 마련해 왔는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이 있었다.²⁾ 이러한 양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성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환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등 당초 성별영향평가제도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성 주류화 전략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접근이 필요하다. 제도가 운영되는 20여 년 동안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가며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제도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관성에서 벗어나

1) 2022년 기준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수는 법령, 계획,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27,109개였고, 개선의견 수용률은 85.5%였는데, 이 수치는 매해 증가한 수치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선 이행률은 2020년 71.0%, 2021년 77.8%, 2022년 79.6%이다.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100.0% 마련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98.7%, 교육청은 94.1% 마련되었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는 100.0%, 기초자치단체는 86.7%, 교육청은 88.0%가 구성을 완료하였다.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최근 몇 년 동안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다각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노력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다각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범사업 추진 배경

그동안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늘 여러 도전 상황을 마주해 왔다. 우선 성별영향평가는 제도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제도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정책과 젠더의 관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전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 정책이 젠더와 무관하지 않고,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이 정책을 기획, 실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 지점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제도가 운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제도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 제도가 왜 의미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일반론적 차원에서 정책이 젠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넘어 각 정책이 젠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고, 각 정책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달성하고 지향해야 할 성평등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준거로 각 부처가 달성해야 하는 성평등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제시하기도 하였지만,³⁾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의제가 성평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요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상 과제 수의 확대나 정책 개선 이행률의 증가는 성과는 있지만, 제도의 양적 성과만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성과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개선안의 내용과 이를 통한 성평등 실현의 기여 정도, 정책 개선을 통한 국민 체감도 등을 의미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성과도 있었고 제도와 정책에 내재된 성차별적 요소 개선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성차별적 구조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제시되는 개선안에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기도 쉽지 않다. 새로운 개선안이 제안되지 못하는 것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고, 실행을 위한 체제도 충분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사업 또는 정책 의제와 관련한 성평등 목표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정책 영역 또는 의제의 성평등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가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의 운영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제도 운영 절차에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적

3) 매해 발간되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는 참고자료로 부처별 양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총 다섯 개의 양성평등목표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피해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를 기준으로 각 부처가 해당 목표와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표준화된 성별영향평가서는 정책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을 제약하고, 나아가 성별영향평가가 각 사업과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형식적인 보고서를 산출해 행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⁴⁾ 실제로 사업 특성에 따라 고려해야 할 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성별영향평가서 양식으로 인해 사업 특성과 사업 추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성평등의 의미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 말해, 성평등이 단순히 수혜에서의 성별 균형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중심의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으로 인해 성평등의 의미가 수혜를 중심으로 제한되고, 수혜율의 성별 차이가 없으면 성불평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 것이다. 한편으로 해당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젠더 이슈를 드러내기보다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차원의 내용을 다루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 또한 각 사업과 관련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결과이지만, 성별영향평가가 사업 특성,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 기간, 대상, 내용, 추진체계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개선안 제시가 어렵고 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책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각 정책 영역에서 고려해

야 할 성별 특성을 분석·정리·제시하기도 하였고, 특정성별영향평가 등과 같이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기존에 시도한 노력들은 정책 영역이라는 큰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성별영향평가 기간과 분석의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지는 한편, 좀 더 내실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1, 2022년 성별영향평가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고,⁵⁾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음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인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특성과 성평등 관련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점검 항목을 간소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 대상사업은 성평등 이슈가 명확하고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축적된 사업으로 선정하며, 2023년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일자리 사업 중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4)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5)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김정수·이슬·남정연·임연규(202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성주류화제도 운영 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이태·김정수·이슬·남정연(2022). 성주류화제도 추진방식 다각화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6)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도서관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2024년에도 시범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상사업은 2023년과 동일하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그동안 축적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사례를 유형화 및 지표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존의 정책 개선안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성평등 이슈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의 피로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성평등 관련성을 좀 더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사업의 대상, 주제, 재원 등 사업 성격, 사업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다.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정책 영역보다 사업의 추진 형태에서 차이가 있었기에 사업 추진 형태별 개선안을 살펴보고, 다시 개선안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일자리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중 도서관사업을 선정하였다. 일자리사업은 성별 격차 해소라는 젠더 이슈가 명확하고 정책 개선안이 패턴화된 경향을 보였다. 도서관사업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상위 지침, 즉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이 제한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혜자의 성별 현황 파악, 만족도 조사 및 반영,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등의 내용으로 전형화되어 있었

다. 그래서 도서관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제안하였다.

일자리 분야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참여자의 성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참여자의 자격 요건이 특정 성별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는지, 근로 환경이 안전하고 편의가 보장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일자리사업의 성평등 목표라 할 수 있는 성별 격차 해소의 차원에서 성별 격차를 야기하는 조건으로 참여자의 자격 요건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체크포인트로 설정하였다. 도서관 사업의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성별 균등한 참여가 보장되는지, 도서관 사업 참여에 신체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제약은 없는지를 점검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2023년 처음으로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되었는데, 시범사업 시작 시기나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의 한계로 많은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2023년에는 일자리 사업 1개, 도서관 사업 5개로,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사업 추진 이후 해당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공무원과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개선안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은 없었고, 제시된 개선안 중 추진 가능한 것을 선택하거나 ‘기타’의견에 추가 의견을 작성하여 지자체 상황에 맞는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는 컨설팅

7)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최유진 외(2022). 성주류화제도 추진방식 다각화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를 참조.

없이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검토하였는데,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개선안에 동의했고,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을 제안하였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서가 간소화되어서 작성이 용이했고, 정책 개선안이 제시되어 있어서 해당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는 당초 자가진단형 성

별영향평가서 추진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시범사업은 6개라는 매우 적은 숫자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올해 추진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업명) 사업 성별영향평가		
구분	검점 결과	
수혜자 현황 점	<p>■ 수혜자의 성별 격차는 ____% 이다.</p> <p>□ 여성남성 □ 남성여성</p>	
	<p>■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사업 지침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것 포함)</p> <p>□ 예 □ 아니오</p>	
	<p>-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p> <p>□ 관련 분야 전공자 □ 관련 분야 종사 경험 □ 관련 분야 자격증 □ 관련 분야 양성과정, 전문과정 등 교육 이수자 □ 관련 분야 수행을 위한 기기 활용 기능제(GPS 등) □ 자차 이용 또는 운전 가능 여부 □ 관련 분야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타: _____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p>	
	<p>- 이 사업의 자격요건은 특정 성별의 사업 참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p> <p>□ 예 □ 아니오 □ 잘 모르겠음</p>	
	<p>- 예라고 응답한 경우, 어떤 요건이 참여를 어렵게 합니까?</p> <p>□ 관련 분야 전공자 □ 관련 분야 종사 경험 □ 관련 분야 자격증 □ 관련 분야 양성과정, 전문과정 등 교육 이수자 □ 관련 분야 수행을 위한 기기 활용 기능제(GPS 등) □ 자차 이용 또는 운전 가능 여부 □ 기타: _____</p>	
사업참여 기회보장	<p>■ 지역의 고용서비스기관에 관련 분야 직업훈련이나 양성과정이 있습니까?</p> <p>□ 예 □ 아니오</p>	
	<p>■ 사업 추진 과정에 지원자격 획득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p> <p>□ 예 □ 아니오</p>	
근로환경	<p>■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을 위해 자차(자전거 등)가 필요합니까?</p> <p>□ 예 □ 아니오</p>	
	<p>■ 근무에 필요한 안전복이나 복장, 신발 제공 시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였습니까?</p> <p>□ 예 □ 아니오 □ 해당없음</p>	

(사업명) 사업 성별영향평가		
구분	검점 결과	
개선 계획	<p>■ 근무에 필요한 장비, 도구를 제공할 때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였습니까?</p> <p>□ 예 □ 아니오 □ 해당없음</p>	
	<p>■ 근무 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까?</p> <p>□ 공용 화장실이 있음 □ 성별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 □ 해당 시설이 필요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시설이 필요없음</p>	
	<p>■ 근무 시 이용할 수 있는 대기 또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까?</p> <p>□ 공용 시설이 있음 □ 성별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음 □ 해당 시설이 필요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시설이 필요없음</p>	
개선 계획	<p>■ 향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까? (※중복 체크 가능)</p> <p>□ 관련 분야 직업훈련 마련을 위해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관과 협의 □ 출퇴근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 및 교통 지원 방안 마련 □ 화장실, 휴게 또는 대기 공간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마련 □ 기타(직접 기술: _____) □ 없음(없는 이유: _____)</p>	
	<p>■ 사업 참여자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 지침에서 수정 또는 변경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시오.</p>	

[그림 1] 일자리사업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서의 주요 지표

나.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지역의 주요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

부서 및 성별영향평가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있는 사업에 대해 성주류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형태이다.⁸⁾ 협업형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지역의 성평등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성평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면서

8)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의 내실화 도모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의 성별영향평가제도와 성평등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2023년에 추진한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파주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해당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2021년부터 파주시 성평등정책 담당인력 젠더전문위원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다각화를 위해 여러 형태의 협업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주시 사업 중 대중교통 노선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파주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면서 주민들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고, 파주시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주시 대중교통 노선 개편사업은 파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성평등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교통 접근성은 자유로운 이동과 안전,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파주시의 경우 교통접근성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이는 구직활동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19년 파주시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이 구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출퇴근 거리, 시간 등 교통 문제'를 꼽은 경우가 여성 10.1%, 남성 5.7%로 성별 격차가 4.4%였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은 '출퇴근 거리, 시간 등 교통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8%였다. 만족도 측면에서도 2019년 파주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만족도가 지하철·경전철, 기차, 택시, 버스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성이 81.9%, 남성이 68.7%로 여성 이용률이 높은데, 여성의 불만족도도 높다는 것은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여성이 더 불편하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파주시의 경우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매우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파주시 경제활동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기획하는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 결과로 제출할 내용이 추가되었다.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를 기획할 당시에는 파주시 여성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주였는데, 그 외에도 파주시에서 요구한 대중교통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의견도 포함하였다.

방향성 설정 이후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였고, 파주시의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방법인 시민소통과 빅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시민소통 차원에서는 의견 수렴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고, 여성 시민의 참여 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했다. 빅데이터 분석 차원에서는 분석할 빅데이터를 선정하는 과정과 분석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 성별을 변수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이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시민소통 차원에서는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모니터링단을 모집하였고, 모니터링단이 파주시 버스정류장 실태와 파주시민 버스 이용에 대한 인터뷰 등을 담당하였다. 모니터링단은 총 10명(여성 9명, 남성 1명)이 활동하였

는데, 사전 교육 차원에서 이동과 젠더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을 위해 우선적으로 파주시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하고, 북부에서도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구획하고 각 지역을 할당하여 모니터링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버스정류장 모니터링은 정보제공 수준, 배차간격, 안전을 주요 내용으로 살펴보고,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목적, 주 이용 노선과 목적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인터뷰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파주시 북부와 남부의 인프라 격차가 컸고, 이용에 있어서 수요도 다르게 나타났다. 북부의 경우 인구의 다수가 고령이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에 거주하는 여성은 의료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컸고, 남부는 경제활동과 관련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북부 지역의 경우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편한 교통 접근성이 중첩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고, 남부는 파주시 내 일자리나 파주시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의 단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파주시와 추진한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모니터링 이후 아직 개선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추후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다음 담당부서 및 여성정책과와 협의하여 노선 개편에 대한 협의와 시설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 나오며

2023년에 시작한 시범사업은 성별영향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⁹⁾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제도 운영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성별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이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축적된 성별영향평가의 성과도 제도 개선 시도를 가능하게 한 기반이었다.

이 글에서 다룬 지방자치단체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를 다각화하는 방안 중 일부이다. 최근 새로운 정책 의제의 등장, 정책의 기획과 실행이 단일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 정책 대상이나 내용의 복합적·다차원적 성격 등 정책과 성별영향평가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과 그 일환인 시범사업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9) 김경희·마경희·김돌순·남궁윤영·이은아(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여성가족부;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참고문헌 •

- 김경희·마경희·김돌순·남궁윤영·이은아(2015). 성평등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 개발. 여성가족부.
- 마경희·성민정·이은아·성경(2019). 성 주류화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23).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김정수·이슬·남정연·임연규(202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성주류화제도 운영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 최유진·김희경·조영주·남궁윤영·이태·김정수·이슬·남정연(2022). 성주류화제도 추진방식 다각화를 위한 운영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례¹⁾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09년 최초의 성인지 예산서인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이래, 성평등 추진을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인 효과로 들 수 있다. 반면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및 제도의 성과관리 유인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각 부처에 권고하고,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부처 자체 평가인 성인지 결산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국회나 국제기구 등에서 지정한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2014~2020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인지 예·결산 운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 시행)이 제정되었다.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확대·개편되었고, 협의회 산하에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재정 및 여성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는 2021년도부터 운영되었는데,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부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실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3년 연속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

1) 본 원고는 다음의 연구보고서들의 내용의 일부를 발췌 및 요약하였음.

김영숙·조선주·성민정·김병권·김해람·안주희·민보람(202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숙·이택면·성민정·김병권·김해람·안주희·박가현(202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로써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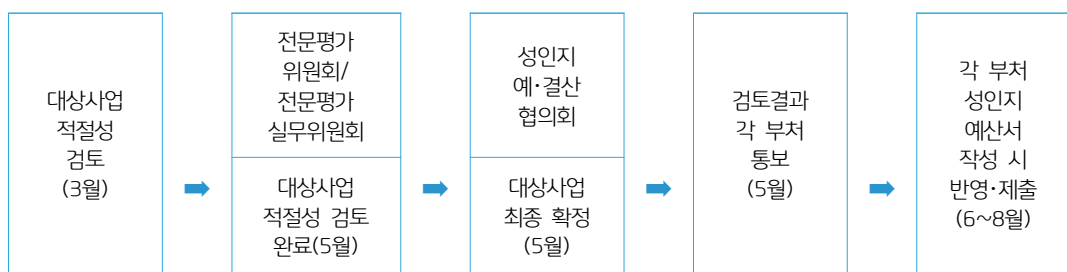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는 성인지 예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주요 부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전문평가위원회는 협의회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평가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젠더 전문가 18인으로 구성된 실무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예·결산 작성 및 제출 일정에 따라 상반기에는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를, 하반기에는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전문

평가위원회가确定的 검토/평가지침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에서 하나의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 젠더 전문가가 교차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짓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검토/평가 결과를 확정 짓기 전에 부처 의견 조회를 실시하여, 검토 및 평가 과정에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전문평가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²⁾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협의회가 최종 확정하여 각 부처에 권고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적절성 검토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성인지 예산 작성 일정에 맞추어 진행된다.



[그림 1]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과정

2) 매년 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됨. 최근년도 예산서인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은, “국가재정법 제 2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 양성평등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 작성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협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되도록 함.

적절성 검토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다. 성인지 예산서가 정부 예산의 첨부서류로 제출되므로 정부 예산 일정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이 확정된(3월 말경) 후 성인지 예산서의 실질적인 제출 기한인 성인지 예산 요구안 제출 시기(5월 말경)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있고, 적절성 검토 결과를 부처에 통보한 후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간을 감안하면, 평가에 걸리는 시간은 약 1.5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빠듯한 일정이다.

이와 같은 제한된 시간 안에 평가지침을 확정하고 실무위원 평가와 평가위원 검토를 마친 후 부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무위원과 평가위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돕기 위해 성인

지 예·결산 협의회 사무국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연초부터 적절성 검토를 준비하고 모든 평가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 대상을 고려할 때 성평등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하는 사업인가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특히 양성평등 추진 5대 과제(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달성과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서와 국가 양성평등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검토 대상 및 지표는 <표 1>에서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의 변화에 따라 매년 개선되어 왔다.

〈표 1〉 적절성 검토 대상 및 지표 개선 현황

(단위: %)

2021년: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검토 지표	2022년: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검토 지표	2023년: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검토 지표
■ 검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중 국회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거나, 부처에서 제외를 요청한 사업 	■ 검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사업, 성평등추진중점사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부처제외요청 사업 등 	■ 검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
□ 검토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 사업 유형(직접·간접)에 상관없이 단일 지표로 검토 	■ 검토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유형(직접·간접)별 지표 적용 	■ 검토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직접·간접 구분 삭제, 사업 목적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는지 여부 명시)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지표체계로 검토
□ 적절성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위원 지표 및 여/부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이 검토하여 최종 판단 	■ 적절성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위원 지표 및 여/부 검토 결과를 평가위원이 검토하여 최종 판단 	■ 적절성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위원은 지표별 검토만을 수행, 평가위원은 지표별 검토결과와 그 우선순위를 근거로 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최종 판단함으로써 검토자의 주관을 최소화하고자 함 → 제2차 전문평가위원회 논의 결과, 사업목적의 적합성만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함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에 의한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의 목적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대상사업 선정절차를 개선하는 데 있다. 적절성 검토를 시작한 2021년 이후 검토 결과 대비 부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을 살펴보면(〈표 2〉 참조), 부

처 반영률은 2021년 83.3%에서 2022년 92.1%, 2023년 97.0%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부처의 저항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결과 대비 부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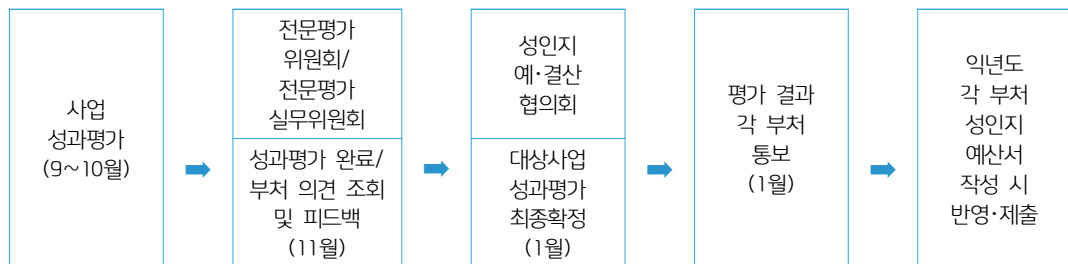
(단위: 사업수)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1년 작성)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2년 작성)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3년 작성)		
	소개	부처 작성	부처 미작성	소개	부처 작성	부처 미작성	소개	부처 작성	부처 미작성
여	194	153	41	229	207	22	306	296	10
부	57	1	56	51	-	51	32	-	32
총계	251	반영 209 (83.3%)	280	반영 258 (92.1%)	338	반영 328 (97.0%)			

4.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관리

하반기에 진행되는 성과평가는 성인지 결산서까지 작성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평가 대상은 성인지 예산서를 3년간 연속적으로 작성한 사업이다. 예를 들면 2022년 평가 대상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사업이다.

성과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계획, 성과, 환류 등 3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처 자체 평가인 성인지 결산서를 보완하고 총평에서 구체적인 개선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 있다. 2022년도부터는 평가 결과를 확정 짓기 전에 부처 의견 조회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성과 평가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 후 9월부터 진행된다.



[그림 2]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 과정

사업의 성과는 ①계획(성평등 목표, 성별 수혜 분석, 성과지표)의 적절성 ②성과(성과목표치의 도전성, 양적 성과, 질적 성과) ③환류(성인지 결산 평가의 환류, 집행, 모니터링 효과성)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그 구체적인 지표는 <표 3>과 같다. 2021년 평가를 시작한 이후 그간의 경험과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선했다. 2023년부터는 평가 영역 및 지표의 배점 구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평가 및 실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설문을 통해 평가 영역 및 지표 간 배점을 조정하였다. 또한 지표 자체의 측정 타당도와 신뢰도, 평가자 간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평가위원회, 실무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지침 및 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예시를 추가하였다.

<표 3> 성과평가 지표 개선 현황

영역	2021~2022년 지표	2023년 지표											
계획	1-1.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는가?	1-1. [사업 성평등 목표의 타당성] 사업의 성평등 목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대과제, 사업의 목적, 내용, 정책대상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설정되었는가?											
	1-2. 성별수해분석(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은 사업의 성평등 목표에 맞게 설정되었는가?	1-2. [성별수해분석의 적절성] 성별수해분석을 위한 통계(대상자, 수혜자, 예산배분) 제시와 그에 입각한 분석이 타당한가?											
	1-3. 사업의 2021년 성과지표는 사업 성평등 목표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고 설정되었는가?	1-3. [성과지표 설정의 적합성] 사업의 2024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성평등 목표와의 관련성, 결과 지향성, 도전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											
성과	2-1. 사업의 2021년 성과목표치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가?												
	2-2. 계획된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는 달성되었는가?	2-1. [목표치 달성 수준]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였거나 미달성 시 수용 가능한 구체적 원인이 제시되었는가? <table><tr><th colspan="4">목표치 미달성</th><th rowspan="3">목표치 달성</th></tr><tr><th rowspan="2">미달 근거 미제시</th><th colspan="2">근거 제시</th><th rowspan="2">설득력 높음</th></tr><tr><th>설득력 낮음</th><th>보통</th></tr></table>	목표치 미달성				목표치 달성	미달 근거 미제시	근거 제시		설득력 높음	설득력 낮음	보통
	목표치 미달성				목표치 달성								
미달 근거 미제시	근거 제시		설득력 높음										
	설득력 낮음	보통											
	2-3. 사업의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2-2.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환류	3-1. 성인지 결산의 성과 및 개선사항이 2022~2023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에 반영 혹은 활용되었는가?	3-1. [성평등 관점의 성과관리 충실성] 2022년 성인지 결산이나 성과평가의 결과가 대상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의 성과관리를 위해 충실하게 활용되었는가?											
	3-2. 사업의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였다고 보는가?	3-2. [성평등 관점의 예산편성 반영 정도] 2022년 성인지 결산 및 성과평가 결과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예산편성에 반영되었는가?											

성과평가 결과는 평가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재정·젠더 관점에서 각각 평가한 결과를 평가위원이 최종 검토하여 협의회에서 확정된 후 각 부처에 통보된다. 2024년도 예산서부터는 전년도 성과평가를 받은 사업인 경우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보되는 결과는 첨부서류로서 성인지 예산서가 가지는 한계와 마찬가지로, 네임앤셰임(Name & Shame) 이상의 영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상의 전년도(2022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평가를 받은 사업의 60% 이상이 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가 반영한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성과지표를 사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로 변경하거나, 성과목표치의 도전성을 높여 상향 조정하거나,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성과평가가 사업의 성인지적 성과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 상의 '22년 성과평가 결과 반영 현황

(단위: 개, %)

	'2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수(A)	'22년 성과평가 사업 수(B)	성과평가 사업 비율 (B/A × 100)	성과평가 반영사항 작성 사업 수(C)	반영률 (C/B × 100)
전체	329	209	63.5	135	64.6
예산	234	155	66.2	93	60.0
기금	95	54	56.8	42	77.8

5. 향후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제도는 도입 이래 약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통해 제도와 관련된 범부처협의를 강화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간 두 차례의 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높이고 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적절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의 높은 반영률로 보아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세부사업 단위의 적절성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집중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성평등 지수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 성평등 기본계획의 관점에서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며,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서는 최종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대상사업은 상향식으로 선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스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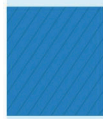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사업 선정 시 국가 성평등 기본계획에 기반한 하향식 선정 방식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부처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상향식 선정 방식을 유지하되,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등 정부 예산의 성인지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향식 선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기획재정부 훈령에 의한 것일 뿐 법률상 근거가 없다. 그 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출연 연구사업의 형태로 협의회 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역시 전문 기관으로서의 지정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sessionId=vvPYflsDRUtv5W9nZgPZUQoy.node10?atchFileId=ATCH_000000000023167&fileSn=1(접속일: 2024.06.04.)
- 김영숙·조선주·성민정·김병권·김해람·안주희·민보람(2022).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숙·이택면·성민정·김병권·김해람·안주희·박가현(2023).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접속일: 2024.06.0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시행령>(접속일: 2024.06.04.)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성인지예결산협의회운영규정>(접속일: 2024.06.04.)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과정과 성과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성인지 통계는 성평등 수준과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별 양성평등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단위의 성별 통계 생산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되고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해 지역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면서 성인지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기관별로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분산형 통계 제도는 필요한 통계를 관계 기관이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통계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통계 생산이 중복되기도 하며 통계 품질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

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통계는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통계에 대해 작성승인제도(「통계법」 제18조)를 도입하여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¹⁾는 공식 통계로서 각종 국가정책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며, 대부분의 양성평등정책 또한 국가승인통계를 기반으로 추진·평가되고 있다. 성인지 통계의 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와 「통계법」 18조를 기반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의 경우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단위에서 성인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법률은 이행을 담보하는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아서 성인지 통계 생산을 강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통계생산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1) 2024년 6월 4일 기준 국가승인통계는 총 1,331종이다.

2007년 「통계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통계청과 협의하여 국가승인통계가 성인지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1항은 “통계작성 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거나 변경, 작성 중지 시 반드시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규정²⁾하여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생산이 가능하게 하였다.

2. 국가승인통계의 점검과정과 방법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011년 통계업무협력약정서(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계업무협력의 첫 출발은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은 신규 및 기존 국가승인통계를 구분하여 점검하기 시작했다.

기존 국가승인통계의 점검과정을 살펴보면, MOU 이전 점검은 주로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과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점검하였다. 2007년에는 1,003종의 국가승인통계 중 성별 분리가 가능한 802종에 대해 조사표의 성별 구분 여부를 처음

으로 파악했고, 2008년과 2012년³⁾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계법 시행 이후 성별 구분 수준을 파악하였다. 2014년에는 고용·임금과 물가·가계소비 분야의 통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고용·임금 분야에서 진행되는 가구 위주의 조사 방식에는 배우자인 여성의 소득과 지출의 특성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물가·가계 분야에서 진행되는 가구 단위의 조사 방식에는 가구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이 동시에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2022년에는 국가승인통계의 조사표뿐 아니라 결과표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점검을 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2017년에는 교육과 문화 분야, 2018년에는 정보·통신과 안전·폭력 분야, 2019년에는 기업경영 분야, 2020년에는 사회조사 분야, 2021년에는 노동 분야에 대해 성인지적 개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2022년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이슈 통계 중 성별직종분리, 이공계(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STEM) 통계, 자산격차,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통계생산 방안을 검토하였고, 2023년은 「통계 생산자와 활용자」를 위한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를 개정하여 발간하였다.

한편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주기적 점검이 이루어졌다. 국가승인통계 점검은 통계청이 승인 완료된 통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여성가족부에 제공⁴⁾하고, 여성가

2) 성별 구분에 대한 조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여성 관련 문제의 조사 등) 3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③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라고 규정함으로써, 인적 통계인 경우 성별 구분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처벌규정이 없어 통계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반면 「통계법」은 제18조를 어길 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으로써, 그 효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3) 2012년은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에 있어 성별 구분 실태의 점검방식을 문항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파악했다.

죽부는 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신규 국가승인통계를 점검하여 양성평등 추진을 위

한 통계 개선 의견을 작성하고, 개선 의견은 통계청이 각 생산기관에 전달하여 수용 여부를 파악한 후 반영 상황을 추적 및 점검하였다.

〈표 1〉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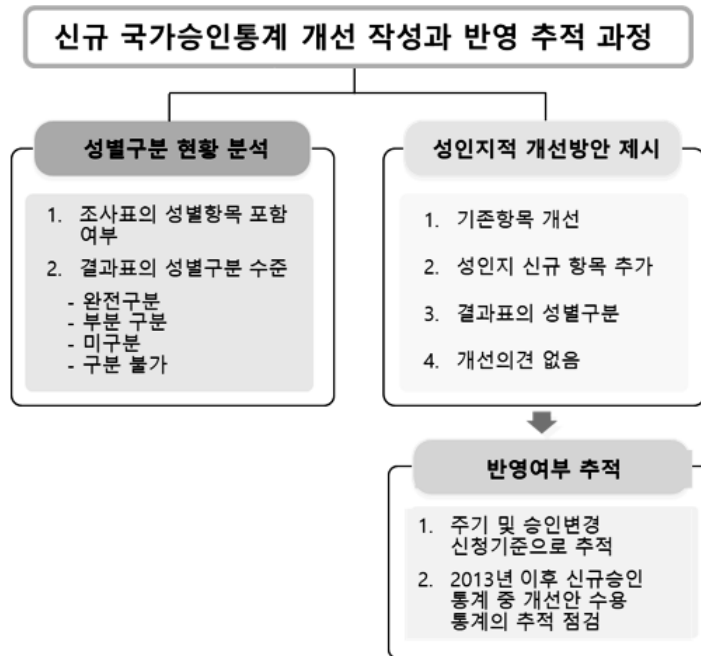
연도	신규 국가승인통계*	기존 국가승인통계
2007	-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
2008	-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
2012	-	국가승인통계 조사표의 성별 구분 현황 파악 * 조사표를 항목별 점검 실시
2014	-	고용·임금 분야와 물가·가계 소비 분야
2016	2015년 신규승인통계 25종	보건·복지 분야 80종
2017	2016년 신규승인통계 44종	교육·문화 분야 46종
2018	2017년 신규승인통계 91종	정보·통신과 안전·폭력 분야 42종
2019	2018년 신규승인통계 78종	기업경영 분야 64종
2020	2019년 신규승인통계 76종	사회조사 103종
2021	2020년 신규승인통계 47종	노동 분야 36종
2022	2021년 신규승인통계 38종	주요 통계생산 방안 (성별직종분라, STEM, 자산격차, 플랫폼 종사자)
2023	2022년 신규승인통계 47종 점검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발간

* 신규 국가승인통계란 점검시점을 기준으로 n-1에 승인된 통계를 의미함.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지적 점검은 조사표의 경우 조사 항목 개선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신규 항목 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표의 경우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점검을 위해 필요한 통계표의 성별 구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점검 결과는 ‘조사 항목의 개선’, ‘신규 항목 추가’, ‘결과표의 개선’, ‘기타 개선’, ‘개선 의견 없음’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사 항목의 개선’은 조사 항목의 조사표에서 설문과 답항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며, ‘신규 항목 추가’는 조사표에 성인지 정책을 추

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를 의미한다. ‘결과표의 개선’은 결과표의 일부 혹은 모든 항목에 대해 성별 구분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타 개선’은 조사 항목, 신규문항 추가, 통계표 개선 등을 제외한 기타 조사표의 구성이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이며, ‘개선 의견 없음’은 성인지적으로 개선 사항이 없다는 의미이다. ‘개선 의견 없음’은 조사 내용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통계법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3항과 4항의 성별 구분 예외 규정에 포함된 경우, 조사 내용과 결과표가 성인지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해당한다.⁵⁾

4) 2020년부터는 연구자가 나라 통계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s://narastat.kr/pms/index.do>)을 통해 직접 내려받아 분석하였다.



[그림 1]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작성 및 반영 추적

[표 2]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점검 방법

개선 방안 제시	개선내용
조사 항목 개선	조사 항목의 질문과 답항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을 요청
신규 항목 추가	조사표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항목의 추가를 요청
결과표의 성별 구분	결과표의 일부 혹은 모든 항목에 대해 성별 구분을 요청
개선 의견 없음	조사 내용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과 결과표가 모두 성인지적으로 작성된 경우

자료: 주재선 외(2018). 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p.5.

한편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은 통계작성의 대상과 항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첫째, ‘성별 구분’은 대상 조사표와 결과표가 모두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에 대해 성별을 구분한 경우이다. 조사표의 경우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모두 성별로 구분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며, 조사 대상이 사업체 또는 기업체와 같이 자연

인이 아닐 때는 사업체 대표자의 성별(혹은 종사자 성별 등)을 통해 구분 여부를 판단한다. 결과표의 경우, 각 통계표의 전체값뿐만 아니라 세부 항목 모두 성별을 구분한 경우를 말한다. 둘째, ‘부분 구분’은 조사 내용의 일부 혹은 결과표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성별을 구분한 경우이다. 조사표의 경우 조사 내용의 일부만 성별로 구분했을 경우를 의미하며, 결과

5) 주재선 외(2020). 2020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p.69.

표의 경우 전체값에 대해서 구분했으나, 세부 항목 일부만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성별 미구분’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사표에 성별 항목을 포함하지 않거나 성별을 구분

하여 조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결과표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제시한 것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구분 불가’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조사 및 항목일 때 해당한다.

〈표 3〉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현황 점검 방법

구분	단위	점검 방법
조사표	조사표 종별	성별 구분 항목 포함여부와 조사표의 종수로 평가 : 구분, 부분 구분, 미구분, 구분 불가
결과표	결과 통계표	결과표의 자연인에 대한 성별 구분 정도로 평가 : 구분, 부분 구분, 미구분, 구분 불가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6.

3.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성과⁶⁾

2011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협력관계로 출발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의 경우, 승인받은 통계에는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개선안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오로지 통계 생산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따라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점검은 개선안의 수용 여부와 이를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모두 점검해야 했다.

기관 수용은 기관이 개선안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하며, 반영이란 기관이 수용한 개선안을 실제로 통계에서 수정·보완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영 건수는 개선안이 요구한 대로 수정될 경우만 포함되며, 해당 개선안의 항목 혹은 결과표가 삭제되거나 개선안과 다른 방향, 즉 성인지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경

우는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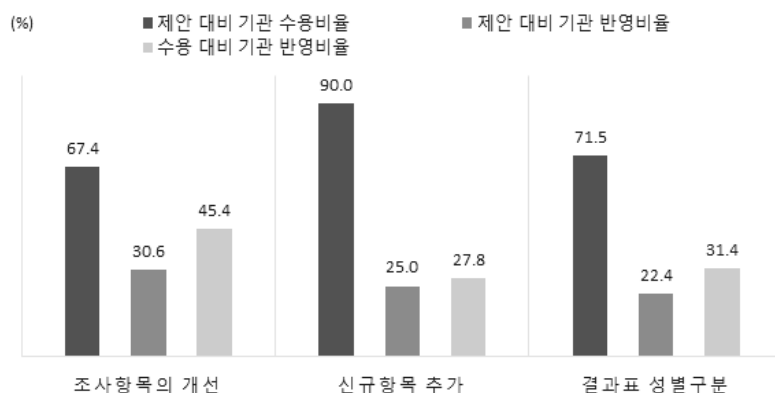
조사 항목 개선안에 대한 기관의 수용과 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2012년에서 2021년 동안 제안한 개선 건수는 144종 258건이고 이 중 통계생산기관이 수용한 건수는 97종 149건이며, 실제 통계 개선으로 반영된 건수는 44종 59건이다. 개선 제안 대비 기관의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66.7%로 가장 높았고 2016년 60.0%, 2012년 48.7%, 2019년 31.3%, 2013년 28.6%, 2018년 23.5% 순으로 나타났고, 2021년은 수용된 개선안에 대한 반영 건수는 20.0%이다.

신규 항목 추가 제안은 2012년 5종 8건, 2013년 2종 4건, 2015년 1종 3건, 그리고 2016년에는 2종 2건이 있었고 2014, 2017, 2019년에는 신규 항목 추가 제안이 1건도 없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신규 항목 추가 종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

6) 신규승인통계를 제외한 기존 분야별 승인통계 점검은 개선안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신규승인통계의 성인지적 점검 결과만 제시한다. 구체적 개선 결과는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부록 5〉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의 수용 및 반영 추적결과(2023년 11월 15일), pp.202~225 참조.

는 4종 6건, 2021년에는 6종 9건에 대해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신규 항목 추가에 대한 수용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는 편이어서 2020년에는 3종 5건, 2021년에는 5종 8건을 수용하여 수용 비율이 75%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한편 결과표에 대한 성별 구분은 2012~2021년 동안 총 165종 3,533건에 대해 제안되었고, 이 중 118종 1,612건이 수용되었으며 2023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총 37종 429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137.

[그림 2] 2012~2021년 신규국가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수용 및 반영 현황

<표 4> 2012~2021년 신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반영 현황

(단위: 종(건), %)

구분	조사 항목의 개선	신규 항목 추가	결과표 성별 구분
개선 요구 종수(건수)(A)	144 (258)	20 (27)	165 (3,533)
기관 수용 종수(건수)(B)	97 (149)	18 (27)	118 (1,612)
기관 반영 종수(건수)(C)	44 (59)	5 (6)	37 (429)
제안 대비 기관 수용 비율: $B/A \times 100$	67.4	90.0	71.5
제안 대비 기관 반영 비율: $C/A \times 100$	30.6	25.0	22.4
수용 대비 기관 반영 비율: $C/B \times 100$	45.4	27.8	31.4

주: 1) 기관 수용여부는 부분수용을 포함함.

2) 반영 종수(건수)는 2023년 10월 15일까지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승인 변경된 조사표와 결과표의 반영 종수임.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137.

4.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제언⁷⁾

여성가족부는 통계청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신규 승인통계의 통계 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점검기준으로 조사 항목 44종 59건, 신규 항목 추가 5종 6건, 결과표 성별 구분 37종 429건의 개선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을 개선안에 대한 수용 비율과 비교해 보면 실제 반영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2021년까지 누적된 조사 항목 개선에 대한 기관 수용 비율은 67.4%이지만 수용한 개선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45.4%이다. 결과표는 더욱 격차가 커서 수용률은 71.5%이지만 수용한 개선안에 대한 반영 비율은 31.4%로 낮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생산기관 통계 담당자의 변경 및 부재, 기관의 통계 개선 의지 부족 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개선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더욱이 2022년 통계청과 함께 진행했던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한 이행점검을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통계생산 기관과의 관계 형성이 높지 않은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과 이행 점검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이에 국가승인통계의 점검과 이행은 통계청, 통계생산기관, 연구기관의 이행 점검 체계를 재확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통계청은 제1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13~'17년)을 수립하면서, 기관별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가통계발전을 위해 성인지 통계생산 여부를 지속하여

점검하고 2014년 이래 공무원, 민간 통계작성 기관 종사자 등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해 왔다. 신규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통계·데이터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제2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18~'22년)과 제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23~'27년)에도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와 추진과제로, 성인지 통계 개선 과제에 대해 ①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추진, ②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체 운영, ③ 관련 공무원의 성인지 통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연차별 추진 일정으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용역과 수시로 성인지 통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 및 교육 시행 추진계획을 설정하였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가승인통계 개선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이후 협의회 활동이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협의체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다. 더욱이 2022년부터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검토와 협조체계 또한 중단되어, 국가승인통계의 개선과 협의가 매우 제한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여성가족부, 통계청,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생산기관의 협력과 동의 없이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생산기관의 협력에 추진될 수 있으나, 통계청이 빠진 개선과 반영

7) 이 제언은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에서 제언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pp.138~141.

점검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관련법과 품질관리 등을 통해 승인통계를 성인지적으로 생산·점검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해 통계생산기관과 통계청, 연구기관과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이후 중지되었던 협의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승인통계의 개선과 이행 점검을 여성가족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더라도, 통계청과는 정기적 협의를 통해 효과적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의 기관별 과제 내용에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은 공동으로 통계 개선을 하게 되어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②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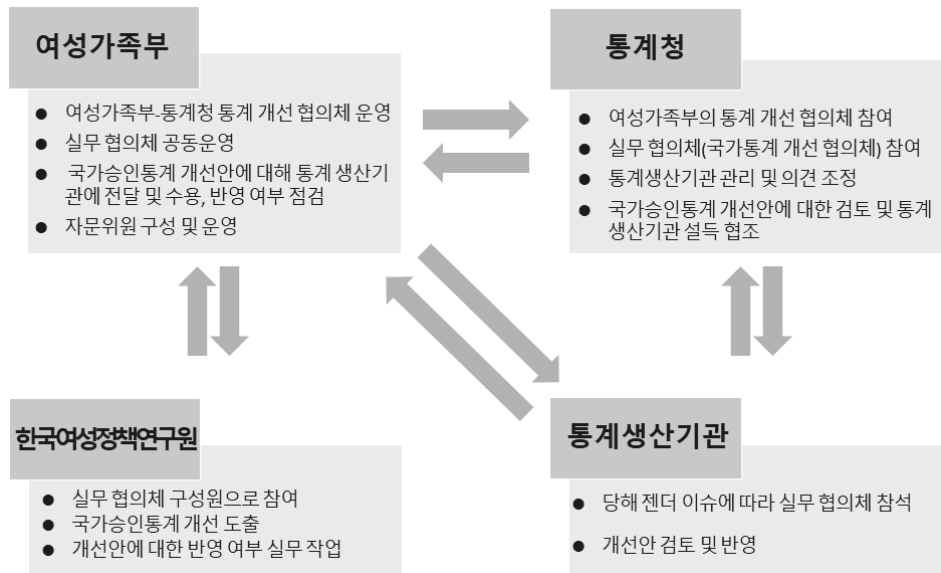
이를 기반으로 여성가족부는 2012년 이래 추진되었던 통계청과의 논의를 재개하여, 여성가족부의 통계생산에 대한 자문과 국가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협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단, 협의체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협의체는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에서 생산되는 통계와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 폭력실태조사, 양성평등실태조사 등 16종의 승인통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2~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다. 이들 통계는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는 조사로, 통계청과 이들 조사가 품질이 좋은 통계로 생산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다양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승인통계가 성인지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체는 국가승인통계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승인통계 협조는 주기적 모임 안건으로 논의하면 되지만,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통계청뿐만 아니라 통계생산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개선안 작성, 생산기관의 협조, 반영 여부 점검 등 세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가승인통계 개선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협력은 물론 통계생산기관의 협조와 연구기관의 개선안 도출 등이 함께해야 효과적 달성이 가능하다. 실무 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의 담당과 담당자, 연구기관 연구자로 구성하며, 정기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해 통계 개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협의체는 정기 모임으로 협의체가 처음 시작했던 당시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의 정기 모임을 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는 전년도 하반기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해당 연도 여성가족부 조사와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며, 하반기는 상반기 논의 사항의 추진 결과와 국가승인통계 개선과 반영 사항을 논의하면 될 것이다.



자료: 주재선 외(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p.140.

[그림 3] 성인지 통계 개선 협의체 구성 및 역할

한편 실무 협의체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해야 한다. 분기별 계획은 필요시 변경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1/4분기는 (n-1)연도 신규 국가승인통계를 통계청과 공유하고 당해 연도 여성가족부가 통계생산 등에 대한 협조 사항을 통계청과 논의를 논의한다. 2/4분기는 (n-2) 연도 신규 승인통계 개선안에 대한 통계생산기관의 수용 여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필요에 따라 개선

협조를 위해 생산기관과의 개선 협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단, 2/4분기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온라인 회의로도 가능할 것이다. 3/4분기는 신규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해 통계청과 공유하고 통계생산기관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4/4분기는 2012년 이래 성인지적 개선안에 대한 기관의 반영 성과를 점검한다. 그리고 실무 협의체의 수시회의는 기타 국가승인통계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필요시 갖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주재선·윤덕경·정성미·송치선(2018). 2018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주재선·김복태·송치선·양준영(2020). 2020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연구.
주재선·김복태·송치선(2023). 2023년 국가승인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 및 성인지 통계 활용 안내서(개정판) 연구.

이슈리뷰

- 제22대 총선과 20%의 여성 국회의원,
60인에게 거는 성평등 정치에 대한 기대
김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김효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조앤 윌리엄스 교수 초청 세미나 후기:
초저출생 시대 여성과 노동 관련 정책적 교훈
김우인 |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유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22대 총선과 20%의 여성 국회의원, 60인에게 거는 성평등 정치에 대한 기대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한국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을 앞섰고, 그 뒤로 2017년 이후 치러진 대선, 지선, 총선 모두 여성 투표율이 남성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도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 유권자를 앞서는 추세가 유지되었다. 선거에 있어서 이 같은 투표율의 변화는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은경 외, 2023: 4-5).

제22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는 60명으로 20%를 기록하여 제21대 총선보다 1%p 증가한 수준에 그쳤지만, 재선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절반을 차지했고 3선 이상이 25%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지역구 당선자가 36명, 비례대표 당선자가 24명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역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앞서는 시작은 20대 총선부터였고,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1명 많은 정도였는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보다 12명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

〈표 1〉 역대 국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명, %)

	전체 여성의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16대(2000)	16(5.9)*	5 (2.2)**	11 (23.9)***
17대(2004)	39(13.4)	10 (4.1)	29 (51.8)
18대(2008)	41(13.7)	14 (5.7)	27 (50.0)
19대(2012)	47(15.7)	19 (7.7)	28 (51.8)

	전체 여성의원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20대(2016)	51(17.1)	26 (10.2)	25 (53.1)
21대(2020)	57(19.0)	29 (11.4)	28 (59.5)
22대(2024)	60(20.0)	36 (14.2)	24 (52.2)

* 전체 의원 중 여성 비율, ** 전체 지역구 의원 중 여성 비율, *** 전체 비례의원 중 여성 비율

그러나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 후보 30% 권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693명의 공천 후보 중 97명(13.9%)만이 여성 후보자였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할 부분이다.

■ 지역별 여성 후보 현황

여성 후보가 공천되어 출마한 지역을 후보자 수의 순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29명(23.4%), 경기 21명(14.3%), 부산 9명(20.9%), 경북 8명, 광주 6명 정도로, 서울·경기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현황

역시 후보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 많이 당선되어, 서울 11명, 경기 14명, 부산 3명, 경북 3명, 대전 2명, 그리고 대구, 광주, 전남에서 각각 1명이 선출되었다.

여성 후보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세종시였으며, 1명만 나온 지역은 충북, 충남, 제주 지역이었다. 여성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지역은 세종, 충북·충남, 제주를 비롯하여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남 지역이었다. 여성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원인은 해당 지역에 여성 후보자가 없었거나 정당의 지지기반과 거리가 먼 지역에 공천했거나, 반대로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2〉 제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및 당선자의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후보자				당선자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합계	693	596	97	13.9	254	218	36	14.2
서울	124	95	29	23.4	48	37	11	22.9
부산	43	34	9	20.9	18	15	3	16.7
대구	34	31	3	8.8	12	11	1	8.3
인천	38	35	3	7.9	14	14	0	0
광주	36	30	6	16.7	8	7	1	12.5
대전	22	20	2	9.0	7	5	2	28.6
울산	16	14	2	12.5	6	6	0	0
세종	7	7	0	0.	2	2	0	0
경기	147	126	21	14.3	60	46	14	23.3
강원	21	19	2	9.5	8	8	0	0
충북	21	20	1	4.8	8	8	0	0
충남	31	30	1	3.2	11	11	0	0
전북	33	31	2	6.0	10	10	0	0
전남	36	33	3	8.3	10	9	1	10.0
경북	40	32	8	20.0	13	10	3	23.0
경남	37	33	4	10.8	16	16	0	0
제주	7	6	0	0.	3	3	0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및 당선자 통계에서 재구성 (접속일: 2024. 6. 15.)

■ 정당별 여성 후보 현황

정당별 여성 공천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41명, 국민의힘 30명, 녹색정의당 7명, 새로운미래 3명, 개혁신당 6명, 자유통일당 2명, 진보당 5명, 민중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거대 양당 후보자가 71명(73.2%)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별 여성 당선자 수는 더불어민주당 29명, 국민의힘 21명, 조국혁신당 6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¹⁾ 거대 양당 소속이 50명(83.3%)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구 당선자도 거대 양당에서만 선출되어 소수 정당이나 원외 정당에서 지역구를 통한 진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지역구 전체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 비율은 13.9%, 여성 당선자 비율은 14.2%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당선자까지 포함할 경우 여성 의원의 비율이 20%가 된다. 이를 보면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진입 경로로서 비례대표제도의 효과와 유용성은 여전히 크고, 지역구에서의 공천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함을 실감할 수 있다. 과거 총선에서도 역시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비율이 20%를 넘기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 당선자의 소속 정당은 거대 양당인 경우가 80~90%에 가까운 현실을 볼 때, 거대 양당의 여성 후보 공천은 여성 의원 수와 직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본선 경쟁력과 이들 정당의 특정 권역에서의 지지기반을 감안하여 권역별 여성 후보 공천 현황을 정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총 48개 선거구에 양당이 11명(22.9%)을 동일하게 공천하였고, 국민의힘에서 4명, 더불어민주당에서 7명이

당선되었다. 경기도는 총 60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5명(8.3%), 더불어민주당 13명(21.7%)을 공천하였는데, 당선자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1명이 당선되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3명이 모두 당선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는 사실상 현직 국회의원이 가장 많았고, 전직 국회의원이거나 전국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이지만 인천의 경우는 달라서 14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을 공천했고 당선자는 없었다.

거대 양당은 특정 지역에서 우세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동안 여성후보 공천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지역이 소위 당선 가능 지역이라 본다. 제21대 총선(2020년)에서 이들 지역에 여성후보가 공천된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산 8명, 대구 2명, 경북 2명, 경남 0명을 공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1명, 전북 0명, 전남 0명을 공천했다. 또한 상대 정당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즉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국 지지기반이 우세한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이다.

이번 제22대 총선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3명, 대구 1명, 경북 3명, 경남 0명,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1명, 전북 0명, 전남 1명을 공천하여 사실상 지난번 총선과 달라진 점이 없다. 지역별 선거구와 양당의 후보 공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은 18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3명(16.7%),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35.3%)을 공천하였고 국민의힘 3명만 당선되었다. 대구는

1)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현황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cntsDivCd=NAARS&menuNo=600137>

12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1명,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을 공천했고 국민의힘 1명만 당선되었으며, 경북은 13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3명, 더불어민주당 0명을 공천하여 국민의힘 3명이 당선되었다. 경남지역은 16개 선거구에 국민의힘에서 0명, 더불어민주당에서 4명을 공천하여 여성 당선자는 0명을 기록하였으며, 울산 지역도 6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0명, 더불어민주당 1명을 공천하여 여성 당선자는 0명이었다. 영남 지역의 경우 선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국민의힘의 지지기반이 강한 지역이라는 사실이 이번 선거 결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울산, 경남 지역에 공천한 여성 후보자가 0명이고, 대구 지역에도 공천을 1명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 후보의 공천이 매우 저조했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호남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8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고, 전북 10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0명이 출마하여 여성당선자는 0명, 전남 10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 출마하여 여성당선자 1명을 기록하였다. 호남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기반이 강한 지역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호남 지역 전체에 2명의 여성 후보자만을 공천한 것이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여성 후보 공천에 매우 인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거대 양당 지역구 여성 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단위: 명, %)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합계	254	136	30 (11.8)	12	245	89	41 (16.7)	24
서울	48	54	11 (22.9)	4	48	16	11 (22.9)	7
부산	18	8	3 (16.7)	3	17	8	6 (35.3)	0
대구	12	7	1 (8.3)	1	8	2	1 (12.5)	0
인천	14	4	1 (7.1)	0	14	3	1 (7.1)	0
광주	8	1	1 (12.5)	0	8	3	1 (12.5)	1
대전	7	1	0	0	7	4	2 (28.5)	2
울산	6	0	0	0	5	1	1 (20.0)	0
세종	2	4	0	0	1	0	0	0
경기	60	40	5 (8.3)	1	60	18	13 (21.7)	13
강원	8	1	1 (12.5)	0	8	0	0	0
충북	8	1	1 (12.5)	0	8	0	0	0
충남	11	1	0	0	11	2	0	0
전북	10	2	2 (20.0)	0	10	1	0	0
전남	10	1	1 (10.0)	0	10	4	1 (10.0)	1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전체 후보	여성 예비후보	여성 후보	여성 당선자
경북	13	7	3 (23.0)	3	11	0	0	0
경남	16	4	0	0	16	4	4 (25.0)	0
제주	3	0	0	0	3	0	0	0
지역구				12				24
비례				9				5
총합계				21				2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및 당선자 통계에서 재구성 (접속일: 2024. 6. 15.)

한편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 수준의 여성 공천 신청자 수를 파악해 보았다.²⁾ 남성 공천 신청자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므로 공천 신청자 수준에서 성별 비율을 제시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공천을 신청했고, 몇 명이 최종 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여성 후보자와 당선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많았는데, 공천 신청자 수를 보면 국민의힘 136명, 더불어민주당 89명으로 국민의힘 여성 공천 신청자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 공천 신청자는 서울에 각각 54명, 26명, 경기도에 각각 40명, 31명, 인천에 각각 4명, 3명으로 국민의힘에서 많았다.

국민의힘 지역 지지가반이 강한 부산에 각각 8명, 8명, 대구에 각각 7명, 2명, 경북에 각각 7명, 0명, 경남에 각각 4명, 4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지지가반이 강한 광주에 각각 1명, 3명, 전북에 각각 2명, 1명, 전남에 각각 1명, 4명이었다.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던 지역은 국민의힘의 경우 울산

과 제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제주 지역이었다. 여기서 짚어 볼 만한 것은 국민의힘 경남 지역의 4명 공천 신청자 중 한 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역의 지지가반이 강한 호남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여성 예비후보자 수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지역의 지지가반이 강해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경우, 공천과정은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것이 사실이다. 외부 영입인재를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의 당직자나 선출직 출신의 경우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이처럼 여성 정치인의 공천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가 매우 공고함을 보여 준다(김은경·김복태·김혜영, 2020).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전남의 권향엽 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전남에서 46년만에 ‘여성’ 국회의원이 선출³⁾되었다는 것은 호남의 지지가반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 정치인 양성에 소홀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지역구 여성 공천은 매 선거

2) 국민의힘에서는 홈페이지에 지역구 공천신청자 현황자료를 업로드하여 해당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당 공식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집계된 후보자 및 당선자 총 수를 기반으로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수를 파악하였음.

3) 광양 시민신문(2024. 4. 11.) 권향엽 당선... ‘46년만’ 전남 여성 국회의원 <https://www.gycitize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54> (접속일: 2024. 6. 20.).

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⁴⁾ 제21대 총선(2020년)에서도 양대 정당에서는 여성 공천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공천 결과는 10% 초반에 그쳤다. 이번 제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 이 두 정당은 여성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총선거기획단에서는 할당제와 가점제를 적극 검토하여 여성과 청년을 배려하겠다고 밝혔고,⁵⁾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총선거기획단에서부터 밝히고 공천관리 위원회를 구성했다.⁶⁾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여성 후보 30% 공천에 대한 약속과 10%대에 그치는 공천 결과에 실망하는 일이 매 총선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은 정당의 남성 중심적 정치문화 속에 여성 정치인에 대해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 여성 후보자의 정치경력과 공천 방식

공천으로 후보 자격을 확보한 여성 후보자와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예비 후보자의 정치 경력을 살펴보았다. 양당의 후보자 중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중이 전체 후보자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로 공천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경력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후보자로 공천되는 비율이 높았던 데 비해, 현역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지역구 공천은 매우 드물었다. 공천이 확정된 여성 후보자의 국회의원 경력을 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7명, 현역 비례대표의원 3명, 전직 국회의원 6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12명, 현역 비례대표의원 1명, 전직 국회의원 7명이었다. 한편 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후보자 그룹에도 국회의원 경력자가 상당수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1명, 현역 비례대표 6명, 전직 국회의원 4명으로 11명,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지역구의원 5명, 현역 비례대표의원 5명, 전직 국회의원 2명으로 12명이었다. 이들은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보자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경선 또는 단수공천의 결정으로 공천되지 못했다.

광역이나 기초의원 출신도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공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았고, 특히 이 그룹 중 공천이 된 경우는 소속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의 우세지역에 공천된 경우였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후보는 구청장 출신이 국회의원에도 전한 경우였다. 국민의힘 총 3명, 더불어민주당 총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이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만이 최종적으로 공천되었고, 이 중 1명만이 당선되었다.

선출직 경력은 없으나, 청와대(대통령실) 근무 경험 또는 장·차관 경력을 가진 여성 후보자가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같았고, 정당 당직자

4) 김은경(2024), “제22대 총선에서 여성후보 당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정책 토론회(2024.1.19.). 토론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 함.
5) 연합뉴스(2023.11.8.) 與 “총선 공천률에 여성·청년 배려”...할당·가점제 적극 검토: “정치를 오래 한 사람과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여성들의 출발선이 얼마나 갭(차이) 없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청년·여성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룰 세팅에 고려하도록 하겠다.”(국민의힘 사무총장) <https://www.yna.co.kr/view/PKR20231108158900001>
6) 연합뉴스(2024.1.11.) 전략지 청년·여성 우선공천...민주, 공천률 사실상 확장: 총선거기획단에서 제안한 현역 불출마 지역구 등 전략 지역에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 제안을 적용하기로 하고 공천 작업 착수.

출신의 경우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2명, 외부 영입인사에 해당하는 전문가·기업인 집단이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었다.

최종 당선이 확정된 여성 후보자의 정치 경력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국회의원 경력으로 현직 지역구 의원이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전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5명이며 전직 국회의원도 모두 지역구 출신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들 지역구

의원의 최초 국회 진입 경로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지역구로 출발한 의원도 있지만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입한 여성의원도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비중이 상당하였다. 이처럼 비례대표 출신 여성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비례대표가 여성 정치인에게는 국회 진입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현역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신청과 통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표 4〉 거대 양당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정치 경력

(단위: 명)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자	후보자	당선자	예비 후보자	후보자	당선자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1	7	7	5	12	12
	비례	6	3	0	5	1	1
전직 국회의원		4	6	2	2	7	5
광역의원		2	0	0	9	5	1
기초의원		11	3	0	3	1	0
청와대(대통령실), 장·차관 출신		5	3	1	5	3	1
정당인(대변인, 지역위원장 등)		13	3	0	8	2	0
전문가·기업인		29	4	1	9	5	3
시민단체		6	0	0	1	0	0
구청장		3	0	0	1	3	1
언론인		3	1	0	0	1	0
공직자		0	0	0	1	1	0
기타(학생 등)		2	0	0	0	0	0
합계		85	30	12	49	41	24

자료: 국민의힘 홈페이지, 여성후보 관련 신문기사에서 저자 재구성.

여성 후보자의 공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단수공천 14명, 전략공천 3명, 경선 12명으로 단수공천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단수공천 19명, 전략공천 12명, 경선 10명의 순으로 역시 단수공천이 가장 많았다.

공천방식에 따른 본선 당선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당선 비율이 58.3%로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 방식과 관계없이 비슷하였다.

〈표 5〉 거대 양당 지역구 공천 신청자의 공천 방식

(단위: 명, %)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a)	당선자(b)	b/a(%)	후보자(a)	당선자(b)	b/a(%)
	30	12	40.0	41	24	58.5
단수 공천	14	4	28.6	19	11	57.9
전략 공천	3	0	0	12	7	58.3
경선	12	7	58.3	10	6	60.0
기타(국민추천)	1	1	100.0	-	-	-

자료: 국민의힘 홈페이지, 여성후보 관련 신문기사에서 저자 재구성.

이번 총선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의 특징은 현역 국회의원의 재출마가 많았다는 점, 소속 정당의 지지기반이 있는 지역에서 출마했다는 점, 그리고 정당의 지지기반이 확고한 지역에서는 경선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재선 이상의 여성 의원 비율이 50%를 넘는 가운데 3선 이상의 비율도 25%(15명)를 넘어, 이른바 중진 여성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국회가 되었다. 3선 이상 여성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의 나경원(5선), 조배숙(5선), 김희정(3선), 김정재(3선), 임이자(3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6선), 서영교(4선), 한정애(4선), 남인순(4선), 진선미(4선), 전현희(3선), 백혜련(3선), 이재정(3선), 이연주(3선), 송옥주(3선) 의원이다.

마지막으로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별 정치경력을 확인해 보았다. 지역구 당선자와 두드러지는 차이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문가(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 등) 그룹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정당인, 공직자 순이라는 점이었다. 국회의원 경력으로는 제21대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연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전직 국회의원 경력을 가

진 의원은 1명 있었다. 「정당법」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던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는 여성단체 출신이나 여성인권 관련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진입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 제18대, 제19대에도 여성단체를 대표하던 인물들이 비례대표로 당선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력 중 여성인권 증진과 관련된 경력을 가진 여성 의원은 정당인으로서 청와대 출신 1명이 있다. 그동안 여성 관련 이슈에 있어서 여성단체가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구도로 의제를 이끌어 온 것을 상기할 때,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후보를 포함했어야 했다. 또한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제의 취지가 단순히 여성 의원의 양적 증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김은경·김복태, 2021), 할당제의 취지에서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포함했어야 했다. 현재 제22대 비례대표 의원의 공식적인 경력이나 직업만으로 보아 여성단체 등 여성계와 소통할 만한 여성 의원이 누구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6〉 제22대 국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경력

(단위: 명)

구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	-	-	-	-	-
	비례	1	-	-	-	-	1
전직 국회의원		1	-	-	-	-	-
광역의원		-	-	-	1	-	-
기초의원		-	-	-	-	-	-
청와대(대통령실), 장·차관 출신		-	-	1	-	-	-
정당인(대변인, 지역위원장 등)		1	2	-	1	-	-
전문가·기업인		4	2	3	-	1	-
시민단체		1	-	-	-	-	-
구청장		-	-	-	-	-	-
언론인		-	-	-	-	-	-
공직자		1	1	1	-	-	-
대중가수		-	-	1	-	-	-
합계		9	5	6	2	1	1

*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이라는 연합 정당명부를 만들어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명, 진보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당선되었음.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국회의원 검색.

<https://www.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R.do?cntsDivCd=NRPS&menuNo=600137>; 연합뉴스(2024. 4. 11.) [표]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명단⁷⁾에서 저자 재구성.

■ 성평등 공약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0년의 지방선거, 2012년의 총선, 2012년의 대선에서 제시됐던 성평등 공약을 살펴보면 양대 정당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정책의 세부 내용에서 한나라당은 아버지의 출산휴가 확대를, 민주당은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제까지를 공약사항에 담고 있었다. 둘째, 민주당은 성인지적 인권통합 교육이라는 제목하에 여성관련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셋째, 양성평등정책의 실현 의지로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는 성인지예산제도 적용을, 총선과 대선에서

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분석, 성인지통계시스템 구축이라는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이 한나라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김은경, 2013: 24).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8년 미투운동 이후에 실시된 총선이었기에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컸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공약이 다수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정당에 관계없이 선거공약으로 가장 많이 대두된 분야인 저출생·가족 돌봄 이슈도 있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존 선거에서와 유사하게 영유아 등 가족돌봄, 출산지원정

7) 연합뉴스(2024. 4. 11.) [표] 22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인 명단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60200001>

책, 젠더폭력, 한부모 등 가족정책,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책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공약은 없었다. ‘여성부’ 신설이라는 공약이 등장한 지 30년, 성평등정책 실효성 제고라는 공약이 나온 지 불과 10년 만에 여성정책추진체계 폐지라는 공약이 제기되었던 것이다.⁸⁾ 정치권과 국회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는 현상(김은경·전선영, 2022)은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두드러졌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의 논의 주제는 주로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 및 여성가족부 폐지와 연관되어 나타나면서(고민희, 2024: 23~24), 여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가 담론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당파적 논의에 함몰되는 양상을 이어갔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다. 먼저 한국여성정의에서 여성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성평등이나 돌봄 분야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국방에서부터 주거·균형발전, 경제·미래먹거리, 기후·생태 등 다양한 입법과제가 취합되었다. 그러나 이 중 1순위로 꼽힌 것은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제’로 나와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가장 우선적인 입법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⁹⁾ 한편 여성단체 중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각 정당에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에 대한 찬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선거에 참여한 주요 정당들의 답변을 보면, 대체로 젠더폭력 대응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돌

봄서비스체계 개선, 일돌봄 균형, 가족다양성 등에 있어서 찬성의 입장을 보였지만, 여성가족부 강화,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차별금지법, 성평등교육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의당만이 찬성의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정당에서는 입장이 없거나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는 그동안 성평등 정책에 목소리를 내 온 정의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대 남성 보수의 입장을 대변하던 개혁신당과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조국혁신당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는데, 성평등 이슈를 이끌고 갈 선봉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를 찾는다면, 그것은 재선 이상의 여성의원과 3선 이상의 중진급 여성의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성평등 의제가 주로 초선의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그렇기에 주목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 여성단체 출신, 여성가족부 장관 경력을 가진 중진급 여성의원들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여성의 정치대표성에 큰 울림의 목소리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여성 당선자 60명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여성이기에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조금의 주저함을 가져서도 안될 것이다. 여성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했듯이, 국회의원으로서 여성 유권자를 대할 때 역시 ‘국회에, 혼탁한 정치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커다란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절절히 바라는 바이다.

8)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능강화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78%, 남성 응답자의 70.5%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김은경 외, 2023: 143~144).

9) 여성신문 “올해 여성정치인 1호 입법과제는?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12>

• 참고문헌 •

- 고민희(2024). “여성대표성 측면에서 바라본 22대 총선”.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여전히 먼 길 남녀동수. 한국여성정책·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김복태(2021). “비례대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역할과 여성정치세력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한”. 『페미니즘연구』. 21(2), 89-136.
- 김은경·김복태·김혜영(2020). “정당의 성차별적 남성 중심 네트워크와 여성 당직자의 지위”. 『정치·정보연구』. 23(3), 67-100.
- 김은경·김복태·장윤선·염혜경·정하연(2023). 여성 유권자의 세대별 투표행태 변화와 정책투표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경·전선영(2022). “국회에서 사라지는 성평등 의제: 여성위원의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1), 185-227.

국민의힘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¹⁾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경남 거제 집에서 잠자던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하여 숨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교제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 즉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를 규율하고 선도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기반한 ‘가정구성원’ 간 폭력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가 스토킹 행위 등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교제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일상성에 비해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통제에

1) 이 글은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김효정·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집 1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기반하여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글은 결혼하지 않은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소위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을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의 맥락에서 검토·분석하고 교제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강압적 통제로서 교제폭력의 특성

가.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폭력

교제폭력은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의 양상 중 하나로,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의 속성이 그 바탕에 내재되어 있다. 친밀한 파트너를 강압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위계적인 젠더 권력관계를 설정하고, 확인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 가해자는 다양한 폭력의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를 파괴하고 찬탈함으로써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가두어 두려는 전략을 펼친다.

불평등한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교제폭력의 특성으로 인해 교제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는 동등하거나 평등하지 않으며, 여타 젠더기반폭력에서 나타나는 징후와 특성을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교제폭력의 가해자는 여성혐오적 가치관과 태도를 보이고, 종속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도 성적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견 명확해 보이는 이러한 교제폭력의 징후는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시에는 폭력으로 인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파트너의 행동을 연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거나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조금 과하게 집착하는 것 정도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물리적, 신체적, 직접적인 폭력 피해만을 ‘진정한’ 폭력 피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나. 고립과 통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중요한 징후이자 결과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피해자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펼치는 주요한 전략이다. 친밀한 파트너십의 모색 또는 형성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는 앞서 설명한 징후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서서히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애정 및 친밀성과 교묘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고립과 통제로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전략은 서서히, 지속적인 방식으로 강화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계기를 통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종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파트너 관계에서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가해자들은 상대방의 이별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헤어짐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존재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통제와 권력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손쉽게 분노로 전환된다. 피해자의 자율성과 자유를 통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가해자의 전략이 좌절될 때, 가해자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영원히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설정한 위계적 관계가 위협받는다곤 느낀 가해자들은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협박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가둬 두려 시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통제 범위는 피해자 본인을 넘어서 친구와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자해 또는 자살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주변인을 해치겠다는 협박으로 나아가거나, 스토킹 행위 또는 불법촬영 및 유포·유포 협박 등의 성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게 피해자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 가둬두고 통제하려는 가해자의 전략으로 인해 피해자는 점차 가해자에게 종속적·위계적 방식으로 의지하게 되고, 가해자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 종속적·위계적 파트너십의 설정

피해자에 대한 고립과 통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일상의 삶과 행동 속에서 상시로 확인된다. 가해자와의 불평등한 관계는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욕설을 하

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물리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결정권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양상으로도 나타난다.

한국의 가족주의와 성역할 규범은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 관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향후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관계에서 성역할 규범의 설정 등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이러한 성역할 규범을 받아들일수록 남성적인 역할은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양상으로, 여성적인 역할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양상으로 전개된다. 남성과 여성에게 각자의 어울리는 역할이 존재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수행이 권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남성성의 발휘는 ‘폭력’이 아닌 ‘남성성’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라. 친밀함에 가려진 폭력의 위험성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와 친밀성의 구조변동 속에서 비혼, 이혼, 재혼 등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제폭력 이슈 역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연령대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전통적이고 협소한 인식을 넘어서, 중장년층과 고령의 연령대를 포괄하는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이슈로 부상하고 있었다. 비혼 인구의 증가, 중년·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배경으로 중장년 연령대에서 새로운 친밀 관계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스토킹 등 젠더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3년 최초로 개소한 스토킹 피해자 전담 보호시설의 경우, 개소 초기에는 20~30대의 젊은 연령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막상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는 40대 이상의 연령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및 고령의 연령대는 젊은 연령대에 비해 폭력적인 남성성의 발현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폭력 피해로 인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고령층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강제된 동의에 기반한 관계의 지속

교제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상대방이 무엇에 취약한지 그 약점을 알고 파고들며, 협박, 동정심, 애정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여 강제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들에게서 이러한 강제된 동의는 주로 성적 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과 결합하여 나타난다. 교제폭력의 가해자가 학대적인 행위나 성적인 영상 등의 촬영을 요구할 때, 피해자는 그러한 요구에 응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대적 행위와 성적인 촬영물들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파트너와의 관계가 온라인에서 시작된 경우 정보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 법적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 정보 파악이 가능하

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과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특히 스토킹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이 일상화되고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가해자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양상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 안전이별과 피해자 비난의 모순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적인 가해자에게 헤어짐을 요구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최근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연인 관계에서의 헤어짐 이후 보복살인 사건 등으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가해자를 자극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렵고, 안전이별을 도모하기 위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점에서 폭력적인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다. 즉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력성에 대해 인지하고 헤어짐을 결심한 이후에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무사히 이별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이별을 유예하면서 헤어짐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와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피해자의 노력은 모순적이게도 주변인의 관점에서는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지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왜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지지 않는가’, ‘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라는 가정 폭력,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오래된 질

문이 다시금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되돌아가고, 그 속에서 폭력의 책임과 원인을 폭력적인 가해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해자 비난의 논리는 더욱 강화된다.

3. 향후 과제

교제관계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서의 강압적 통제가 구축되는 과정은 직접적이거나, 단일하거나, 가시적인 양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때로는 폭발적이고 직접적인 양상으로, 때로는 간접적이고 교묘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제폭력의 특성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강압적 통제가 살인 등 극단적이거나 폭발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기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대응의 우선 순위는 신체적, 물리적 피해의 정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의 교제관계의 정의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파트너와의 결혼 여부나 데이트 폭력의 낭만성을 삭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제폭력 용어의 사용 등은,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친밀성의 구조 변동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친밀한 파트너를 구성하는 보편적이거나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결혼의 지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및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구성된 현재의 가족 또는 가정구성원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검토와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가족실천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30년이 다가오는 현시점이 현대사회의 가족과 친밀성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현행 법제도의 개념과 내용을 점검하고 검토하여 개선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니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와 그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통제관계의 강압적인 지속과 피해자의 공포에 대한 이해 부족은 안전이별의 방법과 시기를 모색하는 피해자의 노력을 마치 폭력적인 가해자의 곁에 '자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고, 그 속에서 '왜 가해자를 떠나지 않는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되살아나 피해자 비난의 맥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동등하지 않고, 이는 폭력과 협박, 공포에 근거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의 주요 메커니즘인 강압적 통제는 피해자의 기본권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에 기반하여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 피해 없이도 피해자에 대한 조종과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해악과 메커니즘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응 방법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젠더기반폭력으로서 교제폭력 대응의 전 과정과 목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나아가 강압적 통제로서 교제폭력의 근본에는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권력 관계에 기반한 억압과 통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를 평등한 방식으로 전환하

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상대방과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효정(2024).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과 쟁점: 현장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40권 1호.
- 김효정·김정혜·고현승·유화정(2023). 젠더기반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효정·유화정(2024). “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통해 본 강압적 통제의 메커니즘과 자유 탈환을 위한 여성 행위성”. 『여성학논집』, 제41집 1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조앤 윌리엄스 교수 초청 세미나 후기: 초저출생 시대 여성과 노동 관련 정책적 교훈

김우인 (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김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이자 워크라이프 법률센터(Center for WorkLife Law)의 설립자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주제는 ‘초저출생 시대 여성과 노동에 관한 정책적 교훈’으로, 조앤 윌리엄스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원정 본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그리고 구미영 본원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발표에 앞서 본원의 김종숙 원장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최저임을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경직된 직장 문화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 주제 발표의 주요 내용¹⁾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2024년 현재 세계 최대 산업국가 중 하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문화적 가치가 역설적으로 그 가치를 누릴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물질적 풍요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전 세대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왔으나, 이제는 그러한 노동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를 갖는 것이 오히려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따라서 청년 세대는 자녀를 갖지 않기를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이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 및 교육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1) 주제 발표는 별도의 원고 없이 조앤 윌리엄스 교수의 ppt 자료로 진행되었으며 이 글의 저자가 세미나 참관 후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가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노동 시스템이 가족 시스템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이하에서 조앤 윌리엄스 교수의 주제 발표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가. 한국의 이상적인 노동자상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 노동 시스템의 특징을 짚으며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윌리엄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기정하고 이에 준하여 우수한 노동자를 판별한다. 즉,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가 출산이나 육아 또는 그 어떤 일로도 휴직하지 않고 40년 동안 매주 5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주당 40시

간가량일 때 제일 높으며, 그 이상의 노동은 오히려 생산성을 저해한다. 노동시간이 길다고 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님에도 기업은 위와 같은 이상적인 노동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인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할 확률이 남성의 경우 2배, 여성의 경우 2.5배 더 높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고용주가 실질적인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일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 것, 관리자보다 먼저 퇴근하지 않는 것, 여가생활은 퇴근 후에 하는 것 등과 같은 헌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노동자상에 부합하는 인구집단이 기혼 남성 노동자이며, 이들은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의 도움을 받아야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노동자상의 개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성성 경쟁 문화(Masculinity Contest Cultures)에서 이상적 노동자상〉

'남성성 경쟁(Masculinity Contest)'을 통해 끊임없이 이상적인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문화를 '남성성 경쟁 문화(Masculinity Contest Cultures)'라고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고, 전문적 직업을 가진, 높은 계층에 속하는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성이다. 이러한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성성 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이다. 이러한 남성성 경쟁 문화 속에서는 '남자답게' 일을 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perform)하는 사람이 선호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상적인 노동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직장 내 문화 안에서 이상적인 노동자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긴 노동시간과 방대한 업무량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일을 삶의 가장 첫 번째로 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2) 본인이 아닌 다른 동료의 몫을 빼앗아 우위를 선점한다.
- 3) 보편적으로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드러운 행동이나 감정을 숨겨야 한다.
- 4) 이를 통해 본인의 성격이나 특성과 상관없이 '남성다움'과 강함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

문화나 직종에 따라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특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남성성 경쟁 문화가 내재된 직장에서의 공통점은 여성과 이러한 문화를 거부하는 남성이 자연스럽게 부수적인 하급자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 이들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수행하는 데 착취되는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된다는 점이다.

자료: Berdahl, J. L., Cooper, M., Glick, P., Livingston, R. W. and Williams, J. C. (2018) 'Work as a Masculinity Contest', Journal of Social Issues, 74(3), pp.422-448.

윌리엄스 교수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이 이상적인 노동자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에 하나 기혼 여성이 이에 성공한다고 한들 자녀를 방치하는 ‘나쁜 엄마’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한국의 노동 문화가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이 개선되지 않는 큰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노동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대기업이나 공공분야 위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았다. 여성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나.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와 경력단절

한국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윌리엄스 교수는 육아휴직의 활용률이 낮다는 점을 짚었다. 발표자료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2019년 자녀를 갖게 된 여성 중 23%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 중 18%만이 남성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전체 휴직자의 28%로 증가하였지만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면 이는 아직도 적은 비율이다(고용노동부, 2024). 윌리엄스 교수는 육아휴직제도 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한국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종사자 수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육아휴직 제공 등의 각종 법적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윌리엄스 교수는 자녀를 갖게 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한 번 이탈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재진입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3배가량 높고,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경우 평균 45% 정도가 경력 단절을 겪기 쉽다. 한국 여성 노동자의 1/3만이 출산 이후에 같은 직장에서도 일한다는 통계는 바로 이러한 노동실태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압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윌리엄스 교수는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 자녀를 갖게 된 후 낮아지고, 양육을 마친 후에 다시 높아지긴 하지만 자녀를 갖기 전보다는 낮아지는 형태의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녀 양육을 마친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더라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 후 퇴사의 압력이 항상 강제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고용주의 11%만이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시간제 노동이 드물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에서 시간제 노동은 정규직의 반대급부로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는 풀타임이 아닌 시간제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87%에 다다른다는 설문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노동에 대한 일종의 낙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가진 여성이 이상적인 노동자상을 요구하는 한국의 기업에서 풀타임 노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 노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여성 경력단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윌리엄스 교수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퇴직하라는 압력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않더라도 출산한 여

성은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을 내기 위해 스스로 퇴직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러한 노동 시스템 아래에서 육아휴직 제도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해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이 일하는 노동자가 생산성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 교수는 적게 일하더라도 생산성 있을 수 있음을 고용주 측이 인지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육아기 여성의 노동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 한국의 가족 시스템: 한국의 돌봄노동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는 돌봄노동의 부담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 출산, 육아를 꺼리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성의 가사노동 기여 시간이 두 번째로 낮은 국가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8배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며, 6배 더 많은 아이 돌봄 및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대부분 여성의 몫임을 지적하였다. 자녀를 위해 좋은 학교와 과외 선생님을 찾고, 자녀의 숙제를 도와 주거나 학원에 등하원 시키는 등의 일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있어야만 훨씬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것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커리어를 우선시하는 젊은 여성은 결혼과 출산 자체를 꺼리

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지만 보통은 퇴근 시간 전까지만 아이를 돌봐 주기에 가정 내 돌봄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윌리엄스 교수는 노인 돌봄 역시 주로 여성의 몫임을 지적하였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67%는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 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보통 딸 혹은 며느리이다. 여성이 결혼을 할 경우 부모에 더해 시부모까지 부양하는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은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도 노인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부분에 주목하며, 이는 앞서 거론한 주당 50시간 이상의 풀타임 노동이 강제되는 한국의 노동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정된 시간에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생산성 없는 노동자로 치부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문화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가중된 돌봄 부담을 여성이 대부분 도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 시스템 내에서 여성이 한국 기업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노동자'가 되기는 매우 힘들다.

또한 윌리엄스 교수가 앞서 언급했듯 돌봄 노동의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분위기는 직장 내 여성 채용, 평가, 승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윌리엄스 교수는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자녀 부모 및 장시간 노동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노동자상에 대한 기존의 통념이 수정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매주 50시간 이상의 풀타임 노동과 퇴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라. 청년 세대, 저출생 세대

청년세대의 가족에 대한 가치 및 인식의 성별차이 또한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 요인임을 소개하였다. 윌리엄스 교수는 가사노동과 각종 돌봄 의무를 여성이 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기대하는 것과 젊은 남성이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윌리엄스 교수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집계된 명절 전후 월별 협의이혼 신청 건수가 매년 명절 직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한국의 통계를 제시하며, 이를 명절에 시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중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이 여성의 가치관과 더 이상 맞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과 젊은 남성 간의 정치적 성향 또한 간격이 크게 벌어져 성별 간의 견해 차이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선택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윌리엄스 교수는 여성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한국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과 멀어지는 길이며, 따라서 젊은층이 비혼과 비출산을 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문화의 변화가 가장 시급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3. 마치며

윌리엄스 교수의 방한 기념 세미나는 한국의 노동 시스템과 가족 시스템의 특징을 짚으며 최근의 저출생 관련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지만, 노동 시스템과 가족 시스템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가 있는 부모 등 특정 집단을 단순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동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적은 시간 동안 생산성 높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가 있는 노동자, 특히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기업, 정부 및 사회가 가족 시스템 개선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모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저출생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2024).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32 (접속일: 2024.06.14).
- Berdahl, J. L., Cooper, M., Glick, P., Livingston, R. W. and Williams, J. C. (2018). ‘Work as a Masculinity Contest’, *Journal of Social Issues*, 74(3), pp.422-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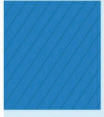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다양한 가족 현황과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이진숙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다양한 가족 현황과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이진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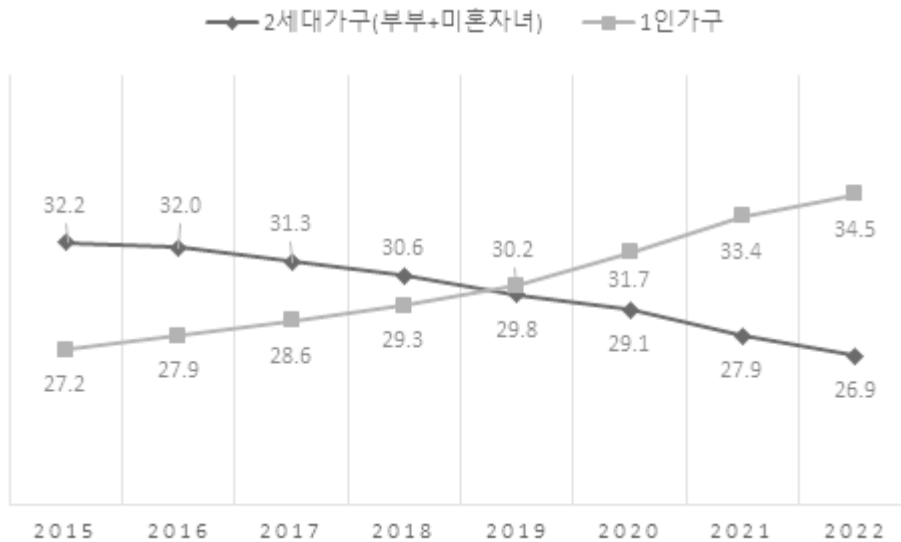
- 만혼과 비혼, 혼인해체, 비혼 출산, 국제결혼 등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과 함께 1인가구 및 다문화가구, 조손 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 또한 기존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인식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 사회의 가족 변화를 예견해 보고자 함.
- 다양한 유형의 가족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인가구와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부모 가구와 미혼모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와 조손 가구의 증가는 비혼과 혼인해체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이며,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의 증가는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외국인과 자녀 출생 증가의 결과로 확인됨.
-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가족을 경제적 생계 관계이자 공동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한 반면,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는 정도는 낮아지고 있음.
- 또한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법적 혼인관계 내에서 부부관계를 맺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에 대하여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의 동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남성이 국제결혼에 더욱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남녀 모두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결혼과 마찬가지로 긍정적 태도로의 변화 폭은 남성이 여성보다 커 남성의 국제결혼 및 혼인해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차 긍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식의 변화가 실제 현상으로 나타나며 다문화 가구 및 1인가구, 조손 가구 등의 증가세로 확인되고 있음. 앞으로는 기존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라는 일반적인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열린 태도로의 인식 변화가 조율될 것으로 보임.

1. 가족 다양성 현황

□ 가족 다양성

- 가족의 대표적인 유형인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점차 감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가구가 등장함. 특히 1인가구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부터 2세대 가구에 비해 더욱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1인가구, 한부모 가구, 미혼모부 가구, 조손 가구, 다문화 가구와 같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가족의 모습을 예견해 보고자 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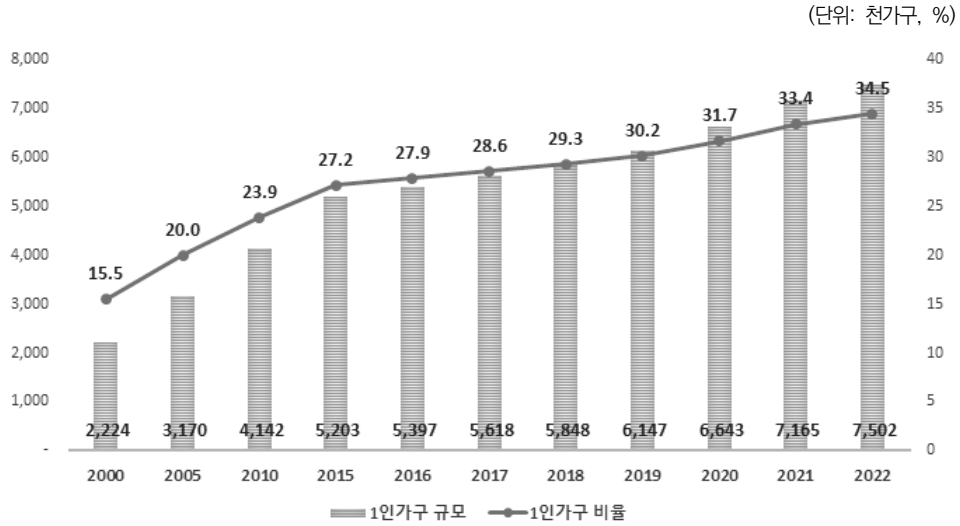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5&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 2세대 가구 및 1인가구 비율(2015~2022)

□ 1인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 규모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0년 전체 가구의 15.5%에 불과하던 1인가구는 20년이 지난 후 31.7%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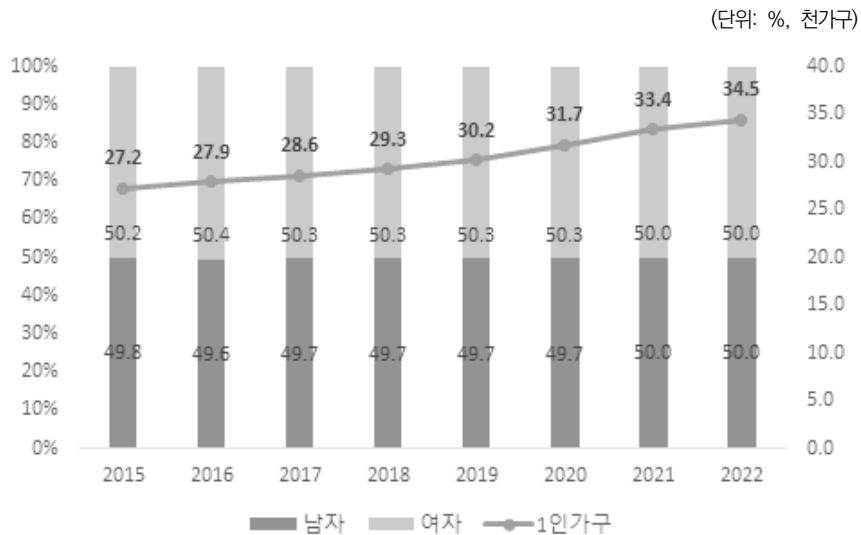


주: 1인가구 비율은 일반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2] 1인가구 비율(2000~2022)

-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1인가구 규모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녀 비중은 비슷한 가운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남자보다 여자 1인가구 비중이 근소하게 많았으나, 2021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음.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3] 성별 1인가구 현황(2015~2022)

- 연령별로 1인가구 규모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자 1인가구가 여자보다 많고 20세 미만과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가구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2015년 대비 2022년 증가 규모를 보면, 남녀 모두 60대 1인가구의 증가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대였음.

〈표 1〉 성별 연령별 1인가구 규모(2015~2022)

(단위: 천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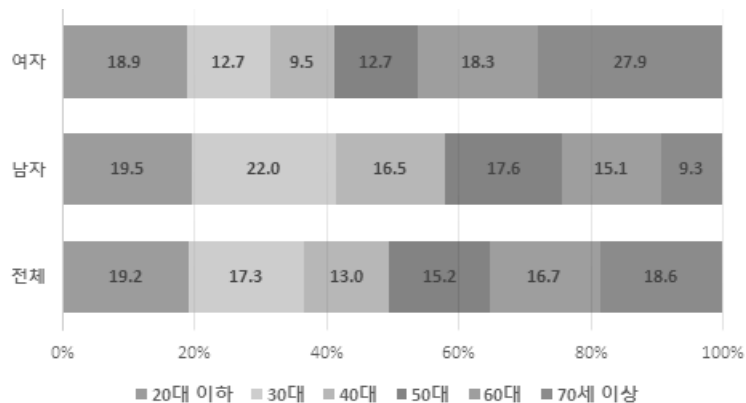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가량 (2022-201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세 미만	28	30	30	32	29	32	28	31	29	31	36	40	25	29	25	28	-3	-2
20대	485	402	504	426	517	444	543	477	587	531	650	617	699	665	707	679	223	277
30대	610	343	607	341	621	347	637	356	664	372	715	401	783	443	824	475	214	132
40대	542	308	532	311	545	318	546	318	550	322	572	332	604	347	619	358	77	50
50대	478	400	499	413	523	425	543	431	562	437	595	445	637	464	660	477	183	77
60대	262	407	298	445	332	473	367	503	398	534	451	588	521	655	565	687	304	281
70대	137	460	148	467	159	484	172	499	185	511	199	534	217	554	238	571	101	111
80세 이상	51	261	58	286	64	303	71	327	80	356	87	383	99	425	111	476	60	214
계	2,593	2,610	2,676	2,722	2,792	2,827	2,906	2,942	3,054	3,094	3,304	3,339	3,584	3,582	3,751	3,751	1,158	1,141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 2022년 1인가구 규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1인가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20대 이하(19.2%)로 나타남. 그러나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별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자의 경우 70세 이상 집단에서 1인가구 비중이 27.9%로 가장 많았고, 남자는 30대가 2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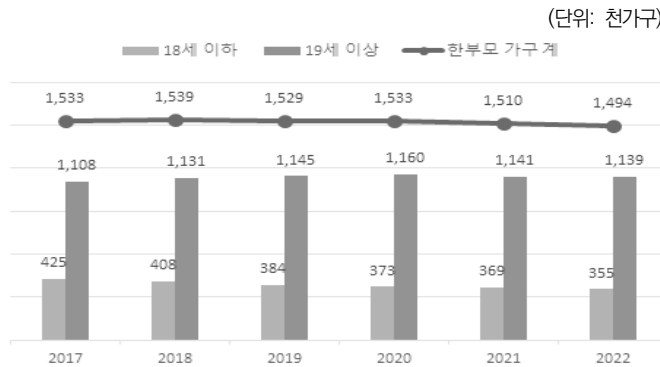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L1502&conn_path=13(접속일: 2024.06.05.)

[그림 4] 성별·연령별 1인가구 비율(2022)

□ 한부모 가구 현황

-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 규모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2017년 1,533천가구에서 2022년에는 1,494천가구로 39천가구 감소하였음.
- 자녀 연령별로 한부모 가구 규모를 비교해 보면, 자녀의 최소 연령이 19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가 18세 이하 자녀 한부모 가구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2년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1,139천가구였으며,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355천가구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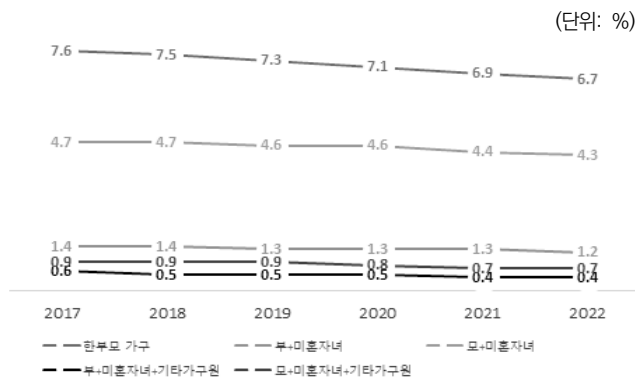


주: 18세 이하 및 19세 이상 구분은 자녀 중 최소 연령 기준.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12(접속일: 2024.06.04.)

[그림 5] 한부모 가구 규모(2017~2022)

-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2017년에는 7.6%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6.7%로 나타남. 한부모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 구성은 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감소 추세임 (2017년 4.7%→2022년 4.3%).



주: 미혼자녀와 그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 이혼 및 사별인 모 또는 부로 구성된 가구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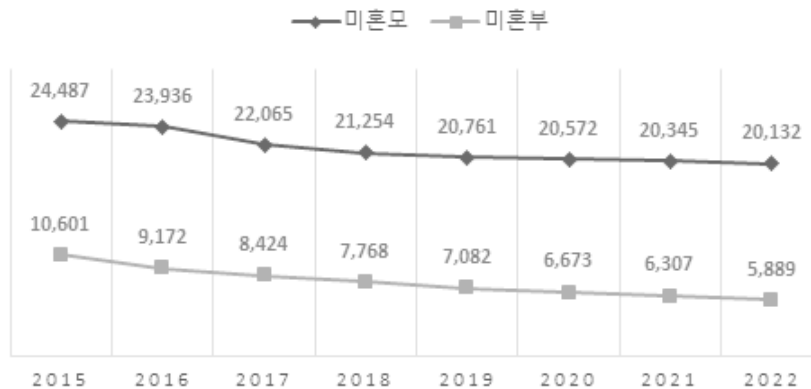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12(접속일: 2024.06.04.)

[그림 6] 한부모 가구 구성별 현황(2017~2022)

□ 미혼모부 현황

- 미혼모부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혼모가 미혼부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미혼부는 2015년 10,601명에서 2022년 5,88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미혼모의 경우 2015년 24,487명에서 2022년 20,132명으로 약 4천명 감소하였음.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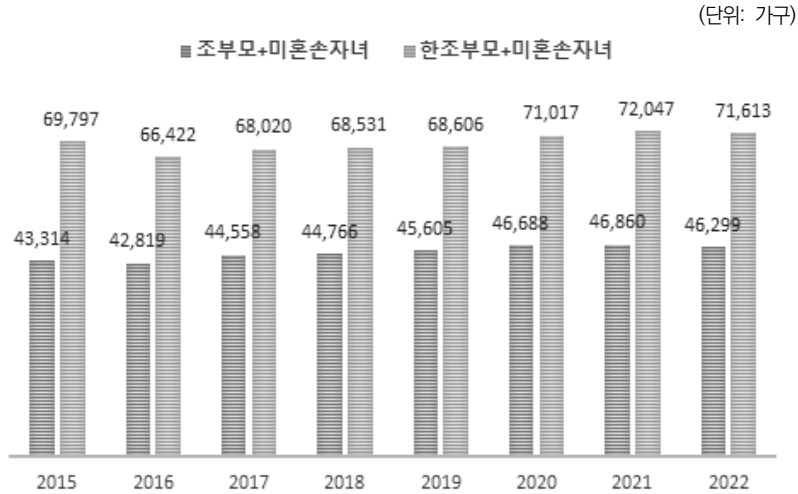
주: 미혼모·부의 개념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법적으로 미혼인 모 또는 부를 뜻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I1601&conn_path=I3(접속일: 2024.06.04.)

[그림 7] 미혼모·부 현황(2015~2022)

□ 조손 가구 현황

- 한부모 가구와 달리 조손 가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대 구성별로 살펴보면 한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가구는 43,314가구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22년에는 46,299가구가 집계되었으며, 한조부모와 미혼 손자녀 가구는 2015년 69,797가구에서 2022년 71,613가구가 집계되었음.



주: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집계. 단, 집단 가구(6인 이상 비혈연 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1517&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8】 조손 가구 현황(2015~2022)

□ 외국인 다문화 가구 현황

- 다문화 가구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규모를 보면 2016년 316,067가구에서 2022년 399,396가구로 증가하였음. 다문화 가구원은 2016년 약 963천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151천명으로 약 188천명 증가하였음.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의 증가는 귀화 내국인 및 출생 내국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보임.
- 전체 가구원 중에서 출생으로 인한 내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귀화 내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외국인 순임.
- 성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가구원 중에서 여자 다문화 가구원이 남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귀화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외국인에서 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출생 내국인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욱 많았음.

〈표 2〉 다문화 가구 현황

(단위: 가구, 명)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다문화 가구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다문화 가구원	963,174	963,801	1,008,520	1,062,423	1,093,228	1,119,267	1,151,004
남자	456,074	457,883	479,983	506,229	519,342	530,080	545,744
여자	507,100	505,918	528,537	556,194	573,886	589,187	605,260
내국인(출생)	595,050	588,968	617,785	649,864	678,973	690,716	707,291
남자	368,662	369,348	386,215	406,195	422,992	429,435	439,392
여자	226,388	219,620	231,570	243,669	255,981	261,281	267,899

항목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내국인(귀화)	158,498	168,519	175,659	184,466	197,730	209,663	222,440
남자	32,381	34,284	36,099	37,123	40,280	42,934	45,512
여자	126,117	134,235	139,560	147,343	157,450	166,729	176,928
외국인(결혼이민자)	158,620	159,958	165,919	173,085	173,104	174,122	175,365
남자	28,484	30,502	32,509	34,312	35,436	36,633	39,013
여자	130,136	129,456	133,410	138,773	137,668	137,489	136,352
외국인(기타)	51,006	46,356	49,157	55,008	43,421	44,766	45,908
남자	26,547	23,749	25,160	28,599	20,634	21,078	21,827
여자	24,459	22,607	23,997	26,409	22,787	23,688	24,081

주: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임

- 내국인(출생) : 출생현재국적 한국(자녀 또는 한국인 배우자 등)

-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국적회복자 제외)

-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 외국인(기타) : 그 외 가구 내 외국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DI502&conn_path=12(접속일: 2024.06.04.)

2. 가족 가치관 변화

□ 가족의 정의

- 가족의 다양한 모습이 포착되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여성가족부 「가족 실태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로 확인해 보고자 함.
- 먼저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족의 정의”에 대한 각 6개의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를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가족은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이 3.8%p 감소한 반면,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4.0%p,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3.1%p 증가하여 동거 기반의 가족 관계와 경제적 측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가족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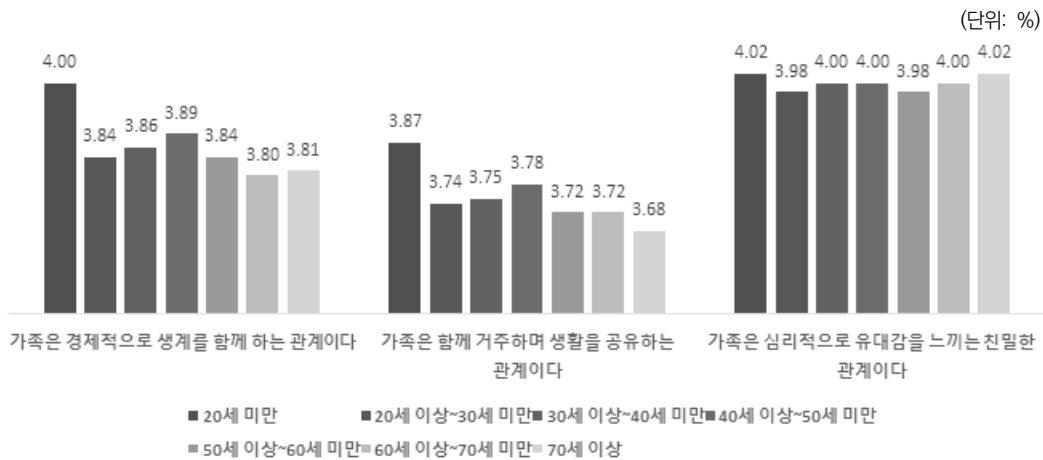
〈표 3〉 가족의 정의

(단위: %, %p)			
구분	2020년	2023년	2020년 대비 변화량
가족은 혈연관계이다	89.0	87.4	-1.6
가족은 법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83.7	83.1	-0.6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	68.8	72.8	4.0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64.7	67.8	3.1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	82.8	79.0	-3.8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이다	38.7	39.7	1.0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동의 비율은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92 〈표 IV-4〉 인용.

- 가족의 정의 중에서 2020년 대비 2023년 변화량이 큰 “가족은 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이다”와 “가족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가족은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느끼는 친밀한 관계이다”에 대하여 연령별 및 혼인상태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세 미만에서 특히 가족은 경제적 생계 관계이며,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의 동의 정도가 높았음. 반면, 가족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20세 미만과 70세 이상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아 연령대별로 가족의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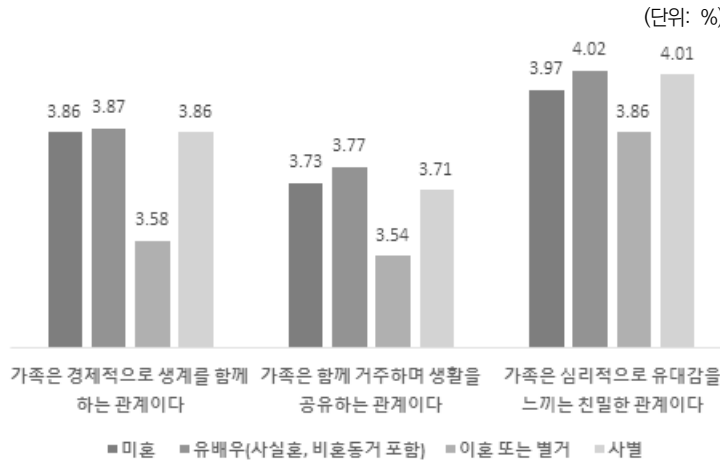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p.95~96 <표 IV-7> 참조

[그림 9] 연령별 가족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

-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 집단과 이혼 또는 별거 상태 집단의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짐. 유배우 집단에서는 가족이 경제적, 공동 생활 공유, 친밀 관계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이혼 또는 별거 상태인 경우에는 동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 혼인해체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가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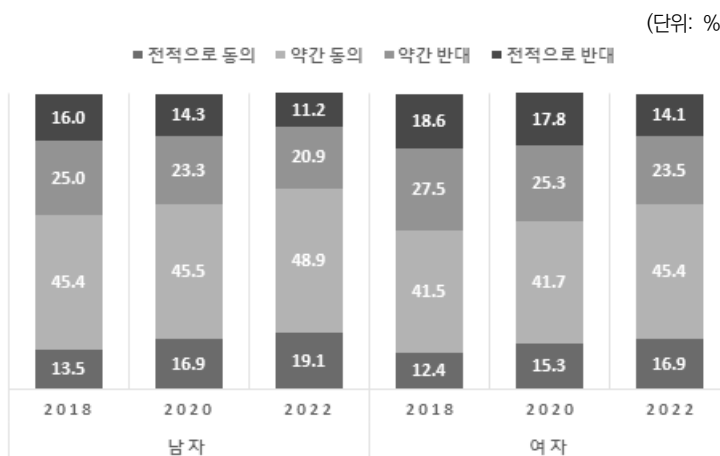
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평균값임.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p.97 <표 IV-8> 참조

[그림 10] 혼인상태별 가족 정의에 대한 인식 차이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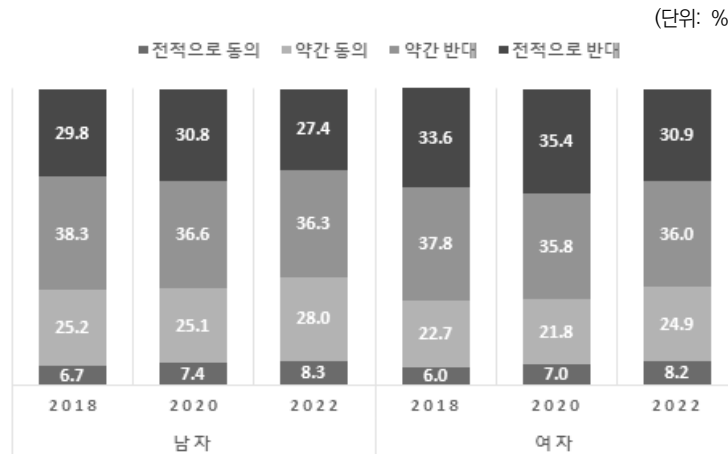
- 다음으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가족 관련 가치관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 보고자 함.
- (비혼 동거) 점차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 모두 전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남자 2018년 13.5%→2022년 19.1%, 여자 2018년 12.4%→2022년 16.9%).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1]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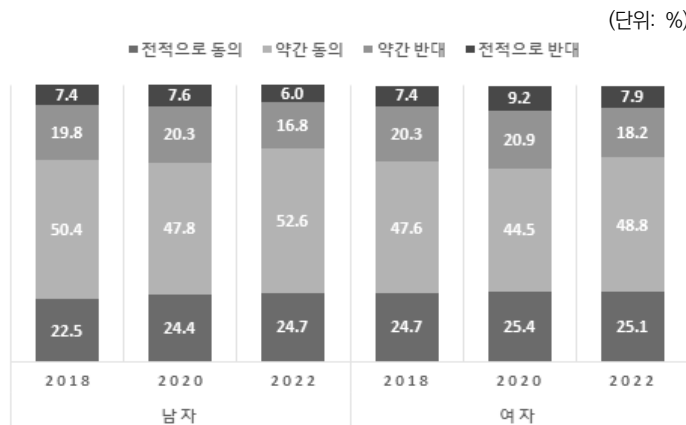
-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2018년에 31.9%가 동의(전적으로 동의+약간 동의)하였으나 2022년 36.3%로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28.7%에서 33.1%로 증가하여 남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늘어남.
- 이를 통해 점차 결혼 제도로부터 탈피하고 있는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2]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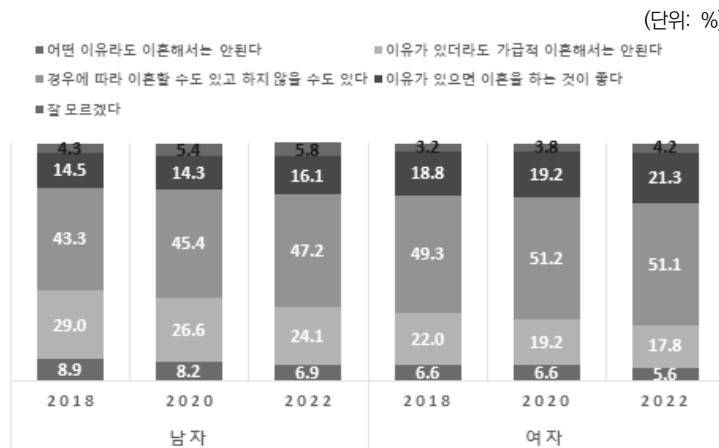
- (외국인과 혼인) 앞서 다문화 가구 및 가구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는 2018년 동의하는 비율이 72.9%에서 2022년 77.3%로 4.4%p 증가했으며, 여자는 2018년 72.3%, 2022년에는 73.9%가 동의하여 1.6%p 상승하였음. 이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3] 외국인과의 결혼할 수 있다

- (이혼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남자의 경우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2022년 24.1%로 2018년보다 4.9%p 감소했으며, 여자의 경우 2018년 22.0%에서 2022년 17.8%로 4.2%p 감소하였음.
- 이를 통해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폭이 여자보다 다소 높아 남녀 모두 이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사회조사', 통계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F070R&conn_path=13(접속일: 2024.06.04.)

[그림 14] 이혼에 대한 견해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 포함¹⁾

- 2024년 3월 초,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본 개정안은 마크롱 정부가 헌법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일 열린 특별 합동회의에서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최종 통과되었다. 프랑스의 헌법 개정에는 상·하원 합동 회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512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프랑스 헌법(제5공화국 헌법) 제34조에 개인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 프랑스 사법부 장관 에릭 듀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가 수정된 헌법을 인장하고 봉인하는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수정된 헌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에마뉼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마련된 공식 석상을 통해 "오늘 기념식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시민 및 거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장이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위 개정을 실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반면, 여전히 여러 규제를 적용하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임신중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이미 임신중지를 합법화하였다. 1975년 제정된 법에서는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임신 10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했고, 이후 2001년에는 임신 12주, 2022년에는 임신 14주까지로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허락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은 국가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 프랑스 의회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이미 임신중지 권리가 합법인 데 굳이 헌법에까지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그러나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합법인데도 프랑스 정부가 헌법을 수정하고자 한 데는 미국의 최근 사례가 주요한 정치적 동기로 작용했다.
-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로 앤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임신중지가 금지되거나 상당 수준 제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다. 실제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인 2022년 6월 9일, 찬성 324표, 반대 155표, 기권 38표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유럽 내에서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가능하더라도 향후 극우 정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 제도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었다. 2022년 11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가 프랑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사실 통과되기까지는 상·하원 간 개헌안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었다. 이후 마크롱 정부가 개헌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서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마침내 특별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 투표에서는 프랑스 내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의원과 많은 보수성향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프랑스에서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포함하게 된 것은 분명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것처럼, 유럽연합 차원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개인의 기본 인권으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하게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우정당 출신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현 이탈리아 정부는 임신중지 권리를 확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포함한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해당 주제로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DW(2024.03.04) "Why France enshrined abortion rights in its constitution", <https://www.dw.com/en/why-france-enshrined-abortion-rights-in-its-constitution/a-68436705> (접속일: 2024.03.23.).
- European Parliament(2022.07.07), "Include the right to abortion in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demand MEP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701IPR34349/include-the-right-to-abortion-in-eu-charter-of-fundamental-rights-demand-meps> (접속일: 2024.03.23.).
- France 24(2024.03.04) "France enshrines abor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historic vote",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40304-france-to-enshrine-abortion-rights-in-country-s-constitution> (접속일: 2024.03.23.).
- France 24(2024.03.08) "France seals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on International Women's Day",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308-france-s-macron-to-seal-abortion-becoming-constitutional-right> (접속일: 2024.03.23.).

스코틀랜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관련 안전 접근 구역 법안 (Safe Access Zones Bill)²⁾

- 2024년 3월 24일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Queen Elizabeth University Hospital) 앞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해당 시위는 주로 미국 텍사스에서 온 사람들 100여 명이 모여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침묵 기도'를 40일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년간 글래스고(Glasgow)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들을 저지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시위를 두고,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던 '안전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 개요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은 공식적으로 '임신중지 서비스 안전 접근 법안(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Bill)'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5월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에 의해 발의되었다. 안전 접근 구역 법안은 의료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생명을 위한 40일'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으로부터 병원을 찾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 반대 활동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스코틀랜드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주변 반경 150미터에 걸쳐 안전한 접근 구역을 설정하여 임신중지 반대시위와 같은 특정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한

2)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신속한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 법안을 둘러싼 쟁점

- 스코틀랜드에서는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물러서라(Back Off Scotland)'와 같은 옹호 단체는 해당 법안이 임신중지를 장려하여 새로 태어날 생명을 해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진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단체와 입장이 같은 텍사스 기반의 임신중지 반대단체의 '생명을 위한 40일'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 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재생산 권리 지지자들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켄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의 컨설턴트인 그렉 이윈 박사(Dr. Gren Irwin)는 이러한 시위자들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비난하고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환자와 직원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강조하며, "이 시위들로 인해 조성된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라픽 플래카드의 존재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표현했다.
-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는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인권 단체들은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임신중지시설 근방에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단순한 입법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긴급한 사안이며, 의료 접근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입법 조치가 실제로 임신중지를 위해 의료시설에 방문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험자 유사프(Humza Yousaf) 장관과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은 임신중지 반대 시위로부터 의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입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이러한 임신중지 반대시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레논(Monica Lennon) 노동당 의원도 스코틀랜드 정부에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합류했으며, 입법 지연이 임신중지 시설을 찾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몇 개월 내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발의한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의 입장이 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입법 절차가 정부 발표 내용처럼 몇 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스코틀랜드에서 재생산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Law Society of Scotland(2023.12.), "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Scotland) Bill", <https://www.lawscot.org.uk/media/1hjhojsjg/23-12-20-hea-equ-crim-chr-abortion-services-safe-access-zones-s-bill-written-evidence.pdf> (접속일: 2024.03.25.).
- BBC. (2023.06.15.), "Abortion clinic 'buffer zone' bill lodged in Scottish Parliament", <https://www.bbc.co.uk/news/uk-scotland-65914694>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3.25.), "Anti-abortion protestors accused of repeated harassment as 100 gather outside Scots hospital",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anti-abortion-protestors-accused-repeated-32433957>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9.21.), "Doctor backs urgent call for buffer zones at Scots abortion clinics as protesters to target hospitals",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doctor-backs-urgent-call-buffer-30996387> (접속일: 2024.03.25.).
-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2024.), "Safe Access Zones Scotland - our campaign to introduce safe access zones in Scotland", <https://bpas-campaigns.org/campaigns/safe-access-zones-scotland/> (접속일: 2024.03.25.).

호주 퀸즐랜드주,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권한 확대³⁾

-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는 2024년 3월 중순 무렵 새로운 '경찰 효율성 법(Policy Efficiency Laws)'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에 별도의 신청없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즉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와 관련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간 호주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보호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호주 내 가정폭력 문제는 '국가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될 만큼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퀸즐랜드주의 경우, 경찰 출동 신고의 40%(2021년 기준)가 가정폭력 사건이며, 2019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가정폭력 집중 단속 기간(Operation Amarok V, 2024년 2월 시행)에 590명이 중대한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었고, 1,183건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만큼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호주 각 주(State)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 주별 관련법에 따라 경찰의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빅토리아(Victoria)주의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에 도착하여 임시보호조치(Family violence safety notice)를 발부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발부 이후 14일 이내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명령(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 및 기소 조치를 한다.

3)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처분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을 통해 가해자에게 임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한다. 임시 구금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 남호주(South Australia)주에서는 경찰 혹은 법원이 임시 개입 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추후 가정폭력법원(Specialist Family Violence Court)에서 진술 청취 후 정식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 이와 같은 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연방법원에서는 국가 가정폭력 명령 체계(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s Scheme; NDVOS)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11월 25일 이후 발급된 가정폭력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s)은 거주지 외 타 주 및 준주(territory)에서도 적용 가능하여 피해자가 동일한 사후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이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지방 법원을 통한 별도의 신청으로 적용 가능하다. 가정폭력이 최초 발생한 지역 내 법원일 필요는 없다.
- 호주 내 각 주별 가정폭력 관련 법안의 내용,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초기대응 범위가 상이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경찰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 방안과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ABC News (2022.04.14). "NSW Police officers convicted of domestic violence have kept their jobs, despite the force's claims of 'zero tolerance'". https://www.abc.net.au/news/2022-04-14/nsw-police-officers-convicted-domestic-violence-kept-jobs/100982038?utm_campaign=abc_news_web&utm_content=link&utm_medium=content_shared&utm_source=abc_news_web (접속일: 2024.03.16.).
-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2024.03.01).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 Scheme", <https://www.ag.gov.au/families-and-marriage/families/family-violence/national-domestic-violence-order-scheme> (접속일: 2024.03.17).
- State government of Queensland (2024.02.01)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inforce/current/act-2012-005> (접속일: 2024.03.16.).
- The Guardian (2024.03.01.) "Queensland police to be granted power to instantly issue year-lo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feb/29/queensland-police-domestic-violence-laws-new-efficiency>) (접속일: 2024.03.06.).
- 9News(2024.02.12) "Almost 600 people 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 offences in four days in NSW", <https://www.9news.com.au/national/new-south-wales-news-police-arrest-almost-600-in-domestic-violence-blitz/1710470b-804b-40a8-91c7-0003d489bcca> (접속일: 2024.03.06.).

오스트리아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 개정⁴⁾

- 2023년 9월, 오스트리아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하여 2019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부모 및 돌봄제공자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을 오스트리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돌봄에 참여하고, 여성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보다 우호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국내법을 수정할 의무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이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수정해 왔다.
- 오스트리아에서 개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parental leave, *Elternkarenz*) 사용 기간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총 24개월이다. 부모는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두 번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소 사용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총 24개월은 양쪽 부모가 각자 최소 두 달씩 사용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모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22개월이 된다. 한부모가정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자영업자이거나 미고용 상태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명이 24개월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작년 하반기 법 개정 이전부터 자녀 출산 후 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했다. 2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3년 연속 일한 근로자라면 성별 상관없이 해당 제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부모 양측 모두 동시에 시간제 근무 전환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인 근로자는 자녀가 만 7세까지 시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했는데, 만 8세로 사용기한이 확대되었다.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즉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일은 계속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낼 수 있다.
-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 후 4주까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전일제, 시간제 고용 형태나 성별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셈이다. 즉,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장받는 기간(protection period, *Kündigungsschutz*)이다. 이러한 보호기간은 출산 시에도 적용되는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 후 4개월간 근로자로서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4)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보호기간 역시 그대로 유효하며 연장된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연기를 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공식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자녀돌봄수당(childcare allowance, *Kinderbetreuungsgeldes*)은 부모 양측 모두 받을 경우 자녀 출생 이후 456일에서 1,063일까지 기간 내에 유연하게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단기 수령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일 35.85유로(한화 약 5만 3천 원)에서 2024년 일 39.33유로(한화 약 5만 7천 원)로 소폭 상승했다. 이 밖에도 소득에 기반하는 자녀돌봄수당도 있는데, 이는 가구 소득 상한선, 자녀 출생 전 최소 고용기간 182일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그리고 남성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는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family-time bonus, *Familienzeitbonus*)이 확대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일 23.91유로(한화 약 3만 5천 원)이었던 반면, 2024년 수당은 52.46유로(한화 약 7만 7천 원)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은 자녀 출산 후 91일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최소 28일에서 최대 31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 또 주목할 부분은 평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 *Gleichbehandlungsgesetz*)에 육아휴직이 새로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간제 육아휴직 사용, 돌봄 휴직 또는 기타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휴가를 쓸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적용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돌봄 행위 자체를 보호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외에도 근로자는 1년에 보통 1주일(근로자 본인의 최대 주당 근로시간), 가족구성원이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돌봄 휴가(care leave, *Pflegefreistellung*)도 사용할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그 대상이며, 배우자 역시 포함될 수 있다.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형제, 자매, 삼촌이나 이모 등 세대원 누구나 그 돌봄 대상으로 포함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계속 아픈 경우, 추가로 1주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만 돌봄 휴직 대상으로 인정되었고, 동일 세대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제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 오스트리아에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일과 돌봄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개선되었다. 특히 휴직 기간이나 남성 근로자의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 양측 모두 돌봄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참고문헌 •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Economy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공식웹사이트), “Elternkarenz,” <https://www.bmaw.gv.at/Themen/Arbeitsrecht/Karenz-und-Teilzeit/Elternkarenz.html> (접속일: 2024.04.21.)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Economy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공식 웹사이트), “Parental Part-Time Work),” <https://www.bmaw.gv.at/en/Topics/Labour-Law/Unpaid-Leave-and-Part-Time-Work/Parental-Part-Time-Work.html> (접속일: 2024.04.21.)
-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Familien - zeit - bonus (Family time bonus),”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79676&portal=oegkportal> (접속일: 2024.04.21.)
-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Kinderbetreuungsgeldes (Childcare allowance),”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79639&portal=oegkportal> (접속일: 2024.04.21.)

영국, 양육자 고용권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변경⁵⁾

- 영국은 2023년부터 양육자/돌봄책임자의 고용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고 일부는 202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양육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직장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국 높은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은 여성의 경제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지 않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양육에 전념하느라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임신을 앞둔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이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 개정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성별 임금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론에서는 양육자 고용권(Parenthood related Employment Rights)에 관련한 영국의 주요 법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유연 근무권 강화(Enhanced Flexible Working Rights) 관련 법 시행
 - 기존에 영국에서는 피고용인의 고용기간이 26주(약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12개월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은 유연한 근무 형태가 향후 고용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했으며, 고용주는 신청인의 요청에 3개월 내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 2024년 4월 6일부터 모든 피고용인은 근무 첫날부터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12개월 내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도록 횟수가 증가했다. 이는 고용되기 전이나 직후부터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된 피고용인의 고용권을 강화하고, 양육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양육 환경과 책임에 맞춰 근무시간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청의 기대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어 유연근무 신청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다. 고용주의

5)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경우 기존에 비해 한 달 단축된 2개월 내에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겨서, 양육자가 양육 필요에 따라 빠르게 근무시간의 조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연 근무권 강화 관련 법안은 가정 내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이 직장을 관두지 않고, 육아를 위한 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한 명의 양육자만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근무를 신청함으로써 가정 내 육아를 균형 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력을 단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연한 남성의 육아휴직(Flexible Paternity Leave Options)을 위한 법 개정
 - 2024년 3월 8일부터 남성의 육아휴직법도 변경되었다. 기존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2주 연속으로 낼 수 있고, 아이가 출생 또는 입양된 후 8주 안에만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변경된 후에는 1주씩 휴가를 두 번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의 출생/입양 후 8주 내에서 52주 내로 확대되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4월 6일 이후 출생 예정인 자녀나 입양될 아이에게 적용된다. 이전에는 출생 또는 입양 예정일 15주 전까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법안 변경 후에는 28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변경된 법안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경에는 육아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출생이나 입양 예정일까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기한을 출생/입양 예정일 28일 전까지 늦춰, 남성이 가정 내의 육아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신생아 치료 유급 휴가(Paid Neonatal Care Leave)법 시행 예정
 - 스투어트 맥도날드(Stuart C. McDonald) 의원에 의해 발의된 신생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법(The Neonatal Care(Leave and Pay) Act)이 2023년 5월 24일부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은 출생 후 첫 28일 동안 7일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양육자에게 최대 12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유연 근무제와 같이 출근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신생아의 건강 문제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돌보면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생아 치료 유급 휴가는 육아 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해당 법은 자선 단체인 블리스(Bliss)에서 2019년 영국에 있는 700명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료받아야 하는 신생아 양육자의 90%가 육아휴직 기간이 신생아가 치료받는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고 대답했다. 또한 많은 수의 양육자들이 신생아가 치료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에 복귀해야 했으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보육원에도 맡길 수 없기에 양육자 중 한 명이 직장을 관둬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미 5명 중 2명의 양육자가 신생아 치료 문제로 인해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양육자가 직장을 관두는

경우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정부의 목적대로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둔 양육자의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신과 육아기간 정리해고 보호법(The Protection from Redundancy(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 시행
 - 평등과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9명 중 1명의 여성이 출산 후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차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 댄 자비스(Dan Jarvis)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 24일 임신과 육아기간의 정리해고 보호법(The Protection from Redundancy(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양육자가 임신 기간 전체와 출산/입양 후 18개월까지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며, 202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 해당 법은 임신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여성이 경험하는 고용 불안을 완화하여, 개인과 가족의 안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거나 경력 단절을 마주해야 하는 많은 여성에게 보호체계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해 고용주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GOV UK, "Flexible Working", <https://www.gov.uk/flexible-working/applying-for-flexible-working> (접속일: 2024.04.15.)
- Startups (2023.12.13.), "Flexible Working Bill: how to respond to a flexible working request", <https://startups.co.uk/people/management/flexible-working-bill/> (접속일: 2024.04.15.)
- People Management. (2024.01.02.), "New flexible working laws: an employer's guide", <https://www.peoplemanagement.co.uk/article/1856168/new-flexible-working-laws-employers-guide> (접속일: 2024.04.15.)
- GOV UK (2023.05.23.), "Workers' rights wins for parents and carers",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kers-rights-wins-for-parents-and-carers> (접속일: 2024.04.15.)
- Harper James (2024.03.27.), "Changes to Statutory Paternity Leave", <https://harperjames.co.uk/article/changes-to-statutory-paternity-leave/> (접속일: 2024.04.16.)
- UK Parliament (House of Lords) (2023.03.14.), "Neonatal Care (Leave and Pay) Bill",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LLN-2023-0018/2023-0018-Neonatal-Care-\(Leave-and-Pay\)-Bill-Largefont.pdf](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LLN-2023-0018/2023-0018-Neonatal-Care-(Leave-and-Pay)-Bill-Largefont.pdf) (접속일: 2024.04.16.)
- Legislation GOV UK (2023.05.24.), "Protection from Redundancy (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 202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17/enacted> (접속일: 2024.04.16.)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Pregnancy and Maternity-Relate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Experience of Mothers",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sites/default/files/mothers_report_-_bis-16-146-pregnancy-and-maternity-related-discrimination-and-disadvantage-experiences-of-mothers_1.pdf (접속일: 2024.04.16.)

호주, ‘여성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한 2024-2025 예산안 발표⁶⁾

-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호주 전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4일에 1명 꼴로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 2024년 4월 28일 현 호주 연방정부의 안토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수도 캔버라에서 개최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 주최측은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긴급사항(National emergency)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긴급 선언은 산불 등 자연재해에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로 다루어져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알바니즈 총리는 이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노력보다는 호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 알바니즈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젠더폭력 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여당 등에서는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해 이미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 이후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2024년 5월 14일 호주 연방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장관(재정부, 여성부 장관 겸임) 또한 이 예산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여성의 안전(women’s safety)이라고 강조하였다.
- 연방정부는 정부 예산서에 “The Women’s Budget Statement”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젠더폭력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직·간접 예산을 약 2조 65억 원가량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 향후 5년간 젠더폭력 관련 프로그램(The Leaving Violence Program) 지원(한화 약 925억 원)(2025년 7월부터 시행)
 - 호주 국립 여성 안전 연구 기구(ANROWS)의 증거 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 지원(한화 약 38억 원)
 - 여성부 내 여성 안전 자원 확보 및 활동 지원(한화 약 350억 원)
 - 가정,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유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 사업비 및 긴급 숙소 지원(한화 약 53억 원)
 -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학 교육 과정 지원(한화 약 17억 원)

6)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가정폭력 피해자(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등의 비자 소지자) 대상 긴급 지원(한화 약 60억 원)
- 향후 4년간 강제 결혼(forced marriage)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스피크 나우(Speak Now)’ 지원 (한화 2.2억 원)
- 호주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됨은 환영하고 있으나, “The Women’s Budget Statement”의 내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특히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의 경우 신규 예산이 배정되기는 했지만, 동일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으며 여전히 소액 지원(약 5,000호주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또 다른 한계로 나타나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으면 주 부양자로부터 입은 젠더폭력 피해에 대해 가정폭력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 혹은 국가장애 보험계획(NDIS)과 같은 일반 서비스 기관 혹은 장애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피해 지원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2024-2025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2024년 5월에 발표되었으므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예산의 집행 내역과 이와 관련한 정책 실효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ABC News (2024.04.28.), “Anthony Albanese tells rally gendered violence is ‘a problem of our entire society’”. <https://www.abc.net.au/news/2024-04-28/pm-addresses-domestic-violence-rally/103777324> (접속일: 2024.04.29.)
- ABC News (2024.05.13.), “One of the budget papers will be all about wome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abc.net.au/news/2024-05-13/womens-budget-statement-explained/103839216> (접속일: 2024.05.13.)
- Australian government (2024.05.14.), Women’s Budget Statement. <https://budget.gov.au/content/womens-statement/download/womens-budget-statement-2024-25.pdf> (접속일: 2024.05.14.)
- Australian government (2024.05.14.), Cost of living help and a future made in Australia. <https://budget.gov.au/content/overview/download/budget-overview-final.pdf> (접속일: 2024.05.13)

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제도적 논쟁⁷⁾

- 프랑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을 ‘폭력, 강압, 위협, 급습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에 의해 성관계를 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합의 여부는 법적으로 정의하는 범위에는

7)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프랑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단, 프랑스에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만 15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제도적 논의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5월 프랑스에서는 정치, 언론, 정치, 문학, 연예계 등 140명이 넘는 인사들이 프랑스 정부의 포괄적인 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 및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미투(#MeToo)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적으로 성차별주의 및 성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사법제도는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입장문에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고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만연하다면서, 2022년 성폭력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이 무려 94%에 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재판에 세울 것, 그리고 보다 강력한 처벌 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전문 수사 인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 프랑스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르 몽드(Le Monde)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법부의 통계상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7년 960여건에서 2022년 1,260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성폭력으로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아직도 적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법적 조항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조항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3월 8일, 임신중지에 관한 자유를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관련 행사에서 이를 언급했다. 이후 여러 국내의 언론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이 유럽연합법상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는 조항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회원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2024년 2월 1일, 프랑스 상원 내 여성권익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었다. 본 청문회에서 에릭 듀퐁-모레티(Éric Dupond-Moretti) 사법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은 유럽연합의 젠더기반폭력 관련 법 내 성폭력 조항에서 합의 여부를 포함하는 데 프랑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비동의 강간죄 조항에 반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권한(competence) 범위와 행사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내린 입장이며, 일각에서 프랑스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 법적으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 반면 듀퐁-모레티 장관은 제도적 틀에서 합의 여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형사법의 법적 역할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법 조항에 합의 여부를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성관계를 지나치게 계약관계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위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듀퐁-모레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세린 앙투완(Jocelyne Antoine) 상원의원은 합의 여부를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반박했다.

-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나탈리 콜랑-우스텔리(Nathalie Colin-Oesterlé) 의원은 “합의가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2년여 간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해 왔다. 현 프랑스 정부는 형법에 합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알고 보면 피해자를 그런 논리를 펼치는 수단 정도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멜라니 포겔(Mélanie Vogel) 상원의원은 유럽연합의 법안 통과에 반대한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정반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냉소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프랑스 정부가 시민사회의 포괄적 성폭력 방지법 제정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형법에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Euractiv (2024.03.14.), “France’s Macron faces backlash over U-turn on legal definition of rape”,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frances-macron-faces-backlash-over-u-turn-on-legal-definition-of-rape/> (접속일: 2024.05.20.)
- Euractiv (2024.02.01.), “Minister of Justice clarifies France’s position over rape inclusion in EU directive”, <https://www.euractiv.com/section/justice-home-affairs/news/minister-of-justice-clarifies-frances-position-over-rape-inclusion-in-eu-directive/> (접속일: 2024.05.20.)
- The Guardian (2024.05.14.), “Impunity is growing: French celebrities call for law to crack down on sexism and sexual violence”, <https://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may/14/french-celebrities-law-crackdown-sexism-sexual-violence> (접속일: 2024.05.20.)
- Le Monde (2024.03.14.), “Macron promises to add ‘consent’ to France’s rape law”,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4/macron-promises-to-add-consent-to-france-s-rape-law_6617206_7.html (접속일: 2024.05.20.)
- Le Monde (2024.03.19.), “The debate over adding consent to France’s legal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9/the-debate-over-adding-consent-to-france-s-legal-definition-of-rape_6632673_7.html (접속일: 2024.05.20.)

영국, 학교 체육활동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도입⁸⁾

-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2023년 3월 “학교 체육활동에서의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School Sport)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주로 학교 내 체육활동에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8)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정책으로, 영국축구협회에서 축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여성 청소년의 축구 참여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LetGirlsPlay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유럽 여성축구 대회에서 영국이 첫 우승을 거두면서, 해당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세계 여성의 날에 리시 수낙 총리(Prime Minister Rishi Sunak)가, 영국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과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3월에는 해당 정책의 개정안이 소개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교 체육활동에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School Sport)” 정책 개요

- 영국에서 아동 비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영국의 최고의료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는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최소 60분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비만계획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에 최소 30분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기 좋은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영국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약 6억 파운드(한화 약 1조 384억 원)를 2년간 전국 학교에 지원한다. 해당 정책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체육 수업 개발, 지도자 인력 양성, 학교 체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 필수 수준 안전 수업인 수영 수업 수료 대상 중 추가 수업이 필요한 학생 대상 수업료 지원 등 체육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의 핵심은 청소년 신체활동 증가와 더불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 청소년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남성 청소년과 동일한 참여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 2024년 정책의 주요 강화/개정 사안

-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후인 2024년 3월에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진행할 것을 권하는 등 개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여성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 수업시간에 여성 청소년이 참여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성 선생님이 하거나, 여성 청소년이 서로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이들이 편안하게 체육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둘째,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지도자를 교육할 때, 여성과 남성 청소년 모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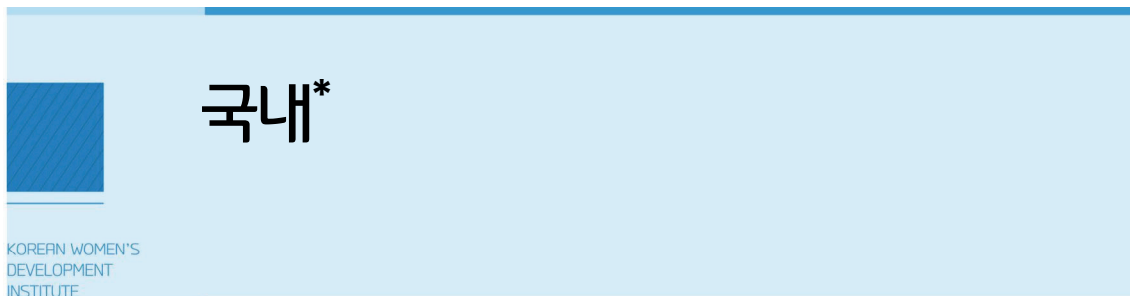
참여시키는 관점에 대해 강조할 것을 권고한다. 교사와 지도자가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일부 체육활동에서 배제하고,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강조할 것을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롤모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여성 체육선생님의 채용을 늘릴 것을 독려한다.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개정안에서, 2022년 여성 유로컵에서 영국 여성 축구팀이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교실 내에서도 여성 체육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체육인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 운동회나 여성 운동선수 초청강연과 같이 여성 청소년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교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앞으로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고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GOV UK (2024.03.23.), "New PE guidance for schools strengthens equal access to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e-guidance-for-schools-strengthens-equal-access-to-sport>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4.03.25.), "How we are ensuring boys and girls have the same opportunities for school sport",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4/03/25/how-ensuring-boys-girls-have-same-opportunities-school-sport/>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3.03.08.), "School sports given huge boost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next generation of Lioness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hool-sports-given-huge-boost-to-level-the-playing-field-for-next-generation-of-lionesses>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3.10.06.), "PE and sport premium for primary schools", <https://www.gov.uk/guidance/pe-and-sport-premium-for-primary-schools> (접속일: 2024.05.19.)
- HM Government (2023.07.), "School Sport and Activity Action Pla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b7c813ef5371000d7aee6c/School_Sport_and_Activity_Action_Plan.pdf (접속일: 2024.05.19.)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였으며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FB1WRyQlqUU7UKLTGP4tFsho.mogef11?mid=news405&bbtSn=70987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사업 수행 기관 확대
-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 안내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2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7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여성가족부,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3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피해자 총 8,983명(2022년 7,979명 대비 12.6% 증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 등 총 275,520건(2022년 234,560건 대비 17.5% 증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0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881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실시

-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에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2024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가족센터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이 함께 기획·운영하며, 언어, 직장문화 이해 등의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 지원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0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891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증가하고, 2세대 가구는 감소하여, 전체 세대 구성비는 부부+자녀 등 2세대 가구 39.6%(2020년 43.2%), 1인 가구 33.6%(2020년 30.4%), 부부 등 1세대 가구 25.1%(2020년 22.8%) 순으로 나타남.
- 자녀계획은 30세 미만 15.7%(2020년 대비 6.8%p ↑), 30대 27.6%(2020년 대비 9.4%p ↑)로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으나, 30세 미만 65.3%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40대(20.5%), 30대(1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0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 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268명) 결정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06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현황 발표

-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2023년 폭력피해 상담 지원 현황 발표
 - 2023년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결과, 2023년 한 해 총 상담 건수는 294,328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6건 상담 진행
 - 총 상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480건 증가했고,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토킹에 의한 피해상담은 총 9,017건으로 2021년 (2,710건) 이후 최근 3년간 2.3배 급증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3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발표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발표
 -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
 -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2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8

여성가족부,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확정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가정폭력’ 피해

자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확정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9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첫 개최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반을 구성하고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 개최
- 설립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구성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35

여성가족부,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지원서비스 안내

- 여성가족부는 '정부24(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힘.
-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행정안전부)'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여성가족부)'을 연계한 데 이어, '정부24'에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 강화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3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따라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개최
-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
- 정부 대표단은 수석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해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제정,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설명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52

여성가족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6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내 다양성 및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 실시
-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조직·인사제도에 ESG·DEI 경영 전략을 적용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직접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및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세부 업무별 ESG·DEI 가치 적용 전략을 토의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58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계」를 작성
- 2023년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521만 8천 명)의 3.5%인 18만 1천 178명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96.7%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긍정 응답률은 2022년 대비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ueSDy-BVWA0HB3IIH1Morc5ub.mogef11?mid=news405&bbsSn=709973

여성가족부,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서면 심의 및 보고

-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

행동계획(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안)»,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를 서면 심의 및 보고했다고 밝힘.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은 예방과 참여 등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총 11개 기관이 이행에 참여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안)」에서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132개 세부과제 추진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2021년(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교육, 건강, 양성평등의식 등이 높은 반면,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ueSDy-BWAOHB3IIH1Morc5ub.mogef11?mid=news405&bbsSn=709978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토록 개정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3.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0691&tag=&nPage=3

[교육부]

교육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대상 제1회 성장훈련 개최

- 교육부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성장훈련 실시

-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참 경력자(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 간 사안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방식으로, 전국 420여 개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총 3회에 걸쳐 실시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4.1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62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복무·수당·승진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신·출산·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 참고문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4.05.17]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885&category=&pageIndex=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하여 본격 운영
-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정책 평가와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 분석·평가 업무 지원 예정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04.26]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29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원고투고 및 자료구독 안내

-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 『여성연구』 논문투고 안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젠더리뷰』 원고투고 안내

『젠더리뷰』는 국내외 여성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특집기사 기획 및 쟁점도출과 새로운 연구주제 및 정책개발 홍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로서 연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발간하고 있습니다. 젠더리뷰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여성관련 전문가나 일반대중과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원고를 상시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여성·가족정책과 연구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독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젠더리뷰』가 더욱 알찬 계간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고 내용

여성·가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기획특집), 여성관련 현안에 대한 진단(이슈리뷰), 국외 정보(국제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등 부문별 원고

투고 요령 및 발간 예정일

원고 분량은 A4 7매(11pt, 줄간격 160, 좌우여백 30) 내외로 하되 10매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획특집 원고 : 10매 내외(원고료 편당 30만 원)
 - 이슈리뷰, 국제리뷰 원고 : 7매 내외(원고료 편당 20만 원)
- 계간지 발간일이 3월, 6월, 9월, 12월 말임을 감안하여 발간일로부터 최소 45일 이전에 원고를 제출해야 해당 월에 게재될 수 있음.

투고 관련 사항

- 기고자의 자격은 별도로 제한 없음.
- 기고된 원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함.
- 게재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 원고 제출 시 반드시 원고 작성자의 연락처를 제출하고, 원고 작성 시 참고문헌 등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람.
- 『젠더리뷰』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있음.

원고 제출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간행물발간 담당
- 전 화 : (02) 3156-7288
- E-mail : journal@kwdimail.re.kr

학술지 『여성연구』 2024년 3호 논문투고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성연구』는 성평등 및 여성정책 관련 기초이론 및 관련 이슈를 탐색하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학술지입니다. 『여성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여성연구』 2024년 3호(통권 122호)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게재 논문 내용

-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논문으로서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형식과 체계를 갖춰 작성된 연구 논문에 한합니다. 단,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 여성연구 투고 요령

- 원고분량은 인쇄쪽수 20쪽(200자 원고지 120매 해당) 이내(요약 포함)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원고 편집 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여성연구」 논문작성요령을 참조해야 합니다.

● 투고 자격

- 성평등 및 관련 정책 연구 전문가

● 발행예정일 및 접수 마감일

- 2024년 7월 31일 (2024년 9월 30일 발간 예정)

● 논문제출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kwdi.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직접 논문 투고

● 논문 관련 문의

- 전 화 : (02) 3156-728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 가입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과 관련된 정책자료, 기초연구자료, 학술지, 통계자료, 여성 관계자료 등 매년 30여 종의 각종 연구보고서와 『젠더리뷰』, 『여성연구』 등 정기간행물을 발간·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여성정책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각급 도서관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자 등이 우리원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구독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자료구독회원으로 등록하시어 우리원 자료를 계속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 기관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모든 자료 제공
단, 대외배포를 제한한 간행물 및 용역보고서 제외(연/150,000원)
- 개인회원 : 우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연/100,000원)

☉ 회원 특전 및 유효기간

- 회원이 되시면 우리원의 여성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음.
- 회원에게는 우리원의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함(회원가입 시 꼭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람).
- 회원에게는 우리원 자료 구입 시 우송료를 면제.

☉ 가입 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지리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 회비납부
우리은행 019-219842-01-006(예금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로번호: 694403(MICR)

☉ 문의처

- 주 소 : (0336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담당
- 전 화 : (02) 3156-7283
- E-mail : kdata@kwidmail.re.kr

* 새로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구보고서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 판매' 서비스 안내

① 자료 판매 안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의 저변 확대와 사회 일반의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정책 관련 연구자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원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에 대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 대상 자료

- 본원에서 발간·제작한 연구보고서 자료(용역과제 제외)

③ 판매 방법

- 전화 주문 판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료관리 TEL. (02) 3156-7283
- E-mail 주문 판매 : kdata@kwidimail.re.kr
- 자료 구독 회원가입 및 주문 판매 : 본원 홈페이지 참조(www.kwdi.re.kr)

④ 판매 대금 납부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019-219842-01-006(예금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